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8

Vol.2 | No.4 Winter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 보장 문제  
한·러 수교 30년, 그리고 인문교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정말 볼 수 있을까?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  
미·중 관계의 위기와 '글로벌 경영'의 전략적 위협 요인  
한러 경제협력 전망  
아태지역 내 다양한 포럼들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동남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시진핑 정책과 '천하' 사상  
남북한 지도자의 새로운 만남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총리의 집권 3기 출범  
러시아-베트남 관계 발달의 현황과 도전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극동 지역 주민들의 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ussia Policy Review

## 2018

Vol.2 | No.4 Winter

『러시아 폴리티시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7호 201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훤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훤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한반도 평화 보장 문제  
올레그 다비도프 | 3

한·러 수교 30년, 그리고 인문교류  
김현택 | 7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정말 볼 수 있을까?  
올레그 다비도프 | 14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18

미·중 관계의 위기와 '글로벌 경영'의 전략적 위협 요인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23

한러 경제협력 전망  
세르게이 루코닌 | 26

아태지역 내 다양한 포럼들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29

동남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예브게니 카나예프 | 33

시진핑 정책과 '천하' 사상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40

남북한 지도자의 새로운 만남  
올레그 다비도프 | 48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총리의 집권 3기 출범  
크리스티나 보다 | 51

러시아-베트남 관계 발달의 현황과 도전  
예브게니 카나예프 | 54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극동 지역 주민들의 태도  
빅토르 라린, 릴리아 라리나, 스베틀라나 토마슈크 | 61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 보장 문제  
한·러 수교 30년, 그리고 인문교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정말 볼 수 있을까?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  
미·중 관계의 위기와 ‘글로벌 경영’의 전략적 위협 요인  
한러 경제협력 전망  
아태지역 내 다양한 포럼들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동남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시진핑 정책과 ‘천하’ 사상  
남북한 지도자의 새로운 만남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총리의 집권 3기 출범  
러시아-베트남 관계 발달의 현황과 도전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극동 지역 주민들의 태도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 한반도 평화 보장 문제

올레그 다비도프

한반도의 평화정착, 다시 말해서 1950~53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발효된 휴전협정을 대체해 확고하게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전체 ‘한국문제’만큼이나 다면적이고 간단치 않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던,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야 여러 노력이 모여 하나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남북한이 실제로 완전하게 화해하고, 남북한이 두 주권국가로서 관계를 형성하며, 북한이 미사일-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기타 전쟁무기를 없애고, 남한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이익에 되도록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방향을 상징하는 것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테면 남북한이 개별국가로서 일정 기간 공존하는 단계,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사회·경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가는 단계, 북한-미국-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계(물론 북-미-일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내부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과 능력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등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문제’를 비가역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나 계획도 실패할 것이다. 그것은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다.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전후 지금까지 이해당사국들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던 사안이다. 그런데 북한과 북한의 과거 군사적 대국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데올로기·군사·정치적 대립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

국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방안을 세우자고 주창한 제네바평화협정(1954년)은 완전히 실패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정치권력은 서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모든 논쟁거리들은 오직 무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타 다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휴전협정을 확고한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했던 1990년대 말 한반도문제 4자회담(미국, 북한, 중국, 한국) 역시 제네바회의와 같은 운명을 걸었을 뿐이다.

종전선언 문서에 조인하는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북미 고위급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됐으며, 김정은과 트럼프, 김정은과 문재인, 이렇게 남북 및 북미 정상이 체결한 공동합의서에도 반영됐다. 이 공동성명에 쓰인 구체적 표현들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양측이 휴전을 확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입장은 비핵화 관련 북미 간 논쟁이 격화되지 않았더라면 순차적으로 문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일정정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장 해제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밟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은 현재 국가 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 채널을 통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비핵화 약속이행에서 멀어지려는 계산된 트릭으로 간주한다. 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잠재력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중단 없는 대규모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야 미국은 한국 정부와 조율하여 평화합의서에 들어갈 사항들을 살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미국은 법적 의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조약이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문서는 남북한 간에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향후 문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보증인으로서의 임무를 맡는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이 늘 그렇듯이, 중국의 고위관료들 역시 애매모호하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하나의 목적, 즉 한반도 평화수립이라는 조건 하에서 핵 폐기로 나아가는’ 두 트랙 사이의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노력의 필요성이라는 그들의 논평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정부는 남한이 마지막 순간에 핵심적인 합의서에 조인하지 못하는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시나리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위험요소는 휴전협정을 완전한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자는 계

획을 ‘잠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한과 미국의 몇몇 정치인이다. 이른 시기에 한반도 전쟁 종식을 포함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는, 한국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이런 문서들을 검토하고 체결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힘들게 조정할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반대해온 북한 군부 내 ‘강경파’들을 달래고 입장을 철회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반(半)공식적인 우회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미봉책들이 북한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채택한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만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당면하고도 매우 복잡한 문제가 각자가 직면한 현 정국을 타개하려는 정치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전문제를 그리 무겁게 여기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자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말로 미루어 보건데, 어떤 내용이 문서에 포함될지한 개연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논의에 참여하고 누가 문서에 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몇몇 목소리를 합쳐 높은 연단에 서서 휴전이 끝나고 평화가 수립됐다고 아무리 떠들어 본들 소용없을 것이며 변하는 것도 없을 터이다.

평화회담을 진행해 가는 와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휴전협정을 대체하여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남북한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 기본 조약을 토대로 남북한 간 정상적이고 평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것,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와 군사기지, 그리고 유엔사령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전망, NLL과 관련된 남북한 사이의 모든 논쟁거리에 대한 조율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중요 협의사항은 유엔 안보리(한국전쟁 참가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자국 의회에서 이에 대해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과 그 상대국(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해) 사이에 정치적 선언서를 채택하고 체결할 때는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문서이든 삼자 사이의 문서이든 상관없이 문서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문서들을 채택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회담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이들 문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논의를 정리해보자. 최근 한반도에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종식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전쟁종식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또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아직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

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조약(합의서) 체결이 현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도 큰 무

리는 없을 듯하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A.V. Romanov) (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Проблемы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11.23)



# 한·러 수교 30년, 그리고 인문교류

김현택

## 1. 왜 인문교류인가?

해외로 떠나는 우리 여행객 숫자가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현상은 세계 관광업계에서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북쪽 넓은 대륙을 육로로 밟아 보거나 배를 타고 남쪽 바다 건너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일이 여의치 않았던 분단된 한반도 공간의 폐쇄성이 오래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튼 바깥세상을 향한 관심과 호기심이 유별난 한국인들은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오래전에는 육로로 접근 가능한 이웃 나라였다. 양국 간 직접 교류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약 150년 전 한반도 최북단 지역 동포들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고, 구한말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시절 한반도로 러시아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된 적도 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교류를 다룬 책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 한국 속 러시아 발자취 150년』과 『포시에트에서 아르바트까지: 러시아 속 한국 발자취 150년』은 사람의 이동과 상호 영향, 상대국 관련 연구,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 상호 인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양자 간 흥미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나라 국민이 직접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던 관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위축되었고, 해방 후 분단 상황에서 러시아(소련)는 한국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갈 수 없는 공간일 뿐 아니라 언급조차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런 나라 소련과 러시아 인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이다. 우리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 서로 조율하면서 일어난 획기적 변화였다. 그 결과 1990년 대 초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치솟았고 한국을 찾은 러시아 공연단과 저명 예술가, 러시아 거주 우리 동포들의 방한 관련 보도가 주요 일간지의 앞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은 러시아 관련 학과를 경쟁하듯 개설했다. 하지만 체제 전환기에 처해있던 당시의 러시아는 우리와 본격적 교류를 추진할 준비와 여유가 없었다. 그 때 러시아를 찾은 한국인 대다수에게 러시아는 부패와 혼란이 난무하는 나라로 각인되었고, 러시아를 향한 우리의 일방적 기대와 희망은 회의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문화·예술 분야 협력도 다변화되고 있다. 단기체류 비자면제 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국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100만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언급되었다. ‘신북방정책’을 표방하며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최근 노력에 대해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긍정적 신호는, 우리 젊은이들 다수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 여행을 즐기고 있고, 러시아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어 학습 붐과 같은 대중적 관심 확산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한·러 지방정부 협력포럼’처럼 양국 수도 중심의 기존 교류 방식을 지방 대 지방 교류로 다변화 및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한 쪽의 일방적 관심이나 과거의 독백 형 교

류 틀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반가운 징후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양국 국민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 확장 및 상호 이해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민 방문을 결산하는 양국 공동 성명서에 “제반 분야에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명시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몇 해 동안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회의와 여러 교류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될 전망이다.

그런데 행사의 기획·진행에 앞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변화한 양국 간 교류 환경 속에서 ‘어떤 정신’을 기반으로, ‘어떤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혜적 쌍방향 교류, 콜라보레이션 기반 공연, 상대방에 대한 편협한 고정 관념 극복, 남·북·러 삼각 협력의 비전 공유, 지방 정부 간 협력 확대, 상호 공감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교류,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 이 같은 방향과 전략들을 두루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인문학 기본 정신에 기초한 ‘인문교류’를 상정해볼 것을 제안한다.

각국의 공공외교가 중요시 하는 ‘자국 매력의 확산,’ 문화·예술교류에서 ‘자국 전통의 우월성’ 등과 같은 시각은 상대국 국민과 진정한 소통과 대화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력이나 문화·예술 역량

이 대등한 수준에 있지 않거나, 지속적인 협력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양자 간 교류에서 타국 문물의 적극적 유입이나 확산은 때로는 경계의 대상이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외교부가 표방하고 나선 ‘인문외교’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이 정책의 입장 때문에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 공자학원과 중국문화센터 개설을 달가워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개별 국가와 민족이 가진 다양성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기중심적 교류가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안으로서의 ‘인문교류’는 무엇인가? 무릇 인문학 고유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자기인식에 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그 국민의 삶과 문화, 역사와 철학, 종교와 정신세계 등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로에게서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러시아는 이런 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냉전 시대의 이념적 편견, 일부 서구 언론의 왜곡된 시각, 1990년 대 혼란기에 형성된 고정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고착된 ‘낮설고 특이한 나라’가 아닌, 이 나라와 국민, 그들의 삶속에서 러시아적 특수성과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비극적 전쟁, 이념적 갈등과 분열, 격변의 역사, 급속한 근대화 과정 등을 경험한 두 나라

는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에도 불구하고 대조와 비교의 맥락에서 많은 교차점과 공통점을 갖는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에서 러시아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정서와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는데 그 땅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낯선 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삶과 운명을 개척한 흥미로운 교류 공간이었다. 수교 이후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상품 덕분에 형성된 ‘경제적 선진국 한국’이라는 단편적 이미지는 최근 우리 영화와 드라마, 한국어, 한국음식, 의료기술, K-beauty, 우리 전통 문화와 정신세계에 대한 복합적 관심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요컨대, 지난 30년 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상대국의 국민,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존과 상생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인문교류’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 2.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30년: 성과와 한계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교류 환경은 상당히 독특하고 복합적이다. 구한말 한반도로 유입된 러시아 문물은 우리가 처음으로 서양 문화를 접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 남아있는 러시아 식 건축물들은 그 구체적 발자취를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공산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한 소련은 우리 지식인들에게 조국 독립에 필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극동과 시베리아 땅

을 누비고, 머나먼 모스크바 까지 이어진 이들의 힘든 여정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고뇌는 다시 회상하고 정리되어야 할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일본에 유학한 우리 지식인들이 국내에 소개한 러시아(소련) 문학이 우리 근현대 문학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으며, 이는 직접적 문화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 3의 매개 공간을 통해 러시아 문학이 유입되고 활발하게 수용된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한다.

해방과 한국 전쟁이후 러시아 문화·예술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러시아 또는 소련은 모두 조심해야 할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소비에트 러시아와 공산주의는 이유를 막론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금기였다. 그렇지만 동서 간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했던 이 시기에도, 19세기 러시아 고전문학 번역 작품이 우리 독자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비슷한 시기에 레닌그라드(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한국학자들이 주도한 한국 고대 및 중세 문학 번역 도서가 소련의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 이국적인 동양 문학으로 제법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념적 또는 정치적 장벽과 관계없이 언제나 '인문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직접교류 채널이 다시 열린 것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외부 세계를 친구와 적으로 선명하게 구분하여 바라보던 우리 시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금기의 땅 소련, 위대한 문학과 예술의 탄생 공간,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공산국가 등 여러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형성된 커다란 호기심은 소련 여행을 부추기는 동인으로

작용했고, 러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동경 때문인지 러시아의 저명 발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방한 공연과 연주회는 한 때 흥행의 보증수표였다. 출판계에서도 그 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20세기 러시아 문학 작품 번역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러 양국 간 직접 교류 초기 단계의 화려한 잔치는 지속적 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곧 막을 내렸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초라한 현실이었다.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 자산을 무수히 배출한 나라,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강대국으로 미국에 맞서 세계 질서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하던 나라의 모습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은 러시아 문화·예술 행사를 대하는 열기도 시간이 가면서 식어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양국 교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준비 부족도 문제였고, 눈앞의 당면 과제에 몰두해야 했던 당시의 러시아로서는 우리의 일방적 접근에 반응할 여력이 없었다. 이처럼 수교 이후 초기 단계의 문화·예술 교류는 외교 관계 수립과 양국민의 직접 교류가 저절로 진정한 소통과 대화로 연결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런 중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몇몇 영역에서는 양국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소중한 결실들이 등장했다. 특히 연극과 발레 등 공연 예술,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이루어진 협업은 양국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류는 일회성, 산발적 행사성, 특정지역 편

중 현상, 주민 참여 형 프로그램과 아티스트 간 협업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정해온 것이 현실이다.

수교 후 한·러 관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양자 간 교류의 활력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소위 말하는 '북방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고조될 때 러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상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시야의 주변으로 밀려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 교류 역시 공통의 목표, 양국민의 관심수준, 전 세계적 교류의 추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양국 정부 간 교류의 장식품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수교 몇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리저리한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잊혀지는 식이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전문가들이 상대방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감대와 노하우를 아직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처럼 오랜 단절 후 다시 만난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축적된 상호 교류 경험, 상대방을 향한 호감과 관심, 인적 교류 규모의 성장과 교류 채널 다변화 같은 조건들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

2020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매개로,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일부 장르에서 이미 축적된 호혜적 협력 성과를 인접 또는 기타 영역으로 확장하는 일에 가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에 한국산 제품의 우

수한 품질로 러시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지금은 우리 대중문화, 의료 관광, 한국어와 한국 음식 등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공비행 중이다. 극동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최근의 긴장완화에 따른 한반도와 러시아와의 높아진 협력 가능성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를 두루 섭렵한 한국의 여행자들에게는 러시아가 가보아야 할 '마지막'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연구자라면 고개를 가우뚱할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여행사 광고 카피나, 전에는 허황되게 들렸던 '서울-평양-모스크바-베를린' 열차 여행 루트 등이 러시아를 가까운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의 매력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러시아 여행을 통해 발견한, 과거와는 다른 변화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바꾸어 가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모스크바 프치옴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국 국민 상호인식수준 조사 결과, 두 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상대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밝히고 있고 '가족과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에서 교류 활성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러시아 문화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입되면서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구체적 청사진 없이 우리가 앞장서서 러시아 문화·예술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던 때도 있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관찰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 모범적인 상호 교류 협력 사례가 등장하면서 양국 정부가 선언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 맞는 문화·예술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150년에 걸쳐 진행된 다양한 접촉과 협력, 그리고 상호 영향의 역사를 양국 전문가들이 새롭게 조명·해석하고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 경쟁력을 국내외에서 배가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 정신에 기반을 둔 ‘인문교류’가 중요한 축매로 기능할 수 있다.

### 3. 새로운 인문교류의 조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를 생각하면, 먼저 정부 간 공식적 관계,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 수준, 격식을 갖춘 대규모 행사, 공식적인 선언과 슬로건 등이 떠오른다. 이런 공식적인 교류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교류들이다.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은 러시아 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갑작스런 상황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은 러시아 환자 관련 보도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수영을 하던 중 상어의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은 환자가 부산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는 일거에 한국의 의료 수준을 극동 지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오른 손 근육이 마비되어 더 이상 작품 활동이 어렵게 된 저명 러시아 화가가 한국에서 정교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라는 기사가 러시아 주요 신문에 실리면서 다시 한

번 러시아인들의 주목을 끌은 바 있다. 작은 일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오래 동안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요란한 행사는 허전함만 남기고 쉽게 잊혀 지기도 하는 법이다. 한국 국악계의 거목으로 큰 족적을 남긴 고 황병기 선생은 부산 피난 시절 LP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우연히 들은 후, 우리 전통 음악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남겼다. 음악에 별다른 조예가 없는 나로서는 이러저러한 짐작을 해볼 뿐이지만,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의 예술 세계와 황병기 선생의 음악을 두루 이해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재임에 분명하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 새로운 협력의 화두로 ‘인문교류’를 제안하는 마당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지금까지 쏟아 온 우리의 노력이 한 쪽에 치우쳐, 필요한 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오래 전 과거의 일로 돌아가 보자. 구한말 러시아의 여행자, 선교사, 작가, 이민자들이 한국 체류 경험을 기록한 글의 양이 적지 않다. 이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누구의 몫일까? 한국을 보는 러시아인의 시선은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관심분야가 아니니 그냥 덮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전공자에게 아쉽게도 러시아 문헌 해독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안타깝게도 한-러 인문교류의 현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 관련 전공자는 많지만 분야를 넘나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양국 교류사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현상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거시적 맥락에 위치시켜보는 등의 작업에는 소극적이다. 러시아 전공자와 국내 인문학

자들 사이의 협력이 이렇진대 한국과 동양을 연구하는 러시아 인문학자들과의 국제적 협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양국 관계에 등장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과 현상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학자 개개인이 칸막이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대화할 때 시작된다. 한·러 인문교류의 첫 걸음은 학자 개인의 태도 변화에서 출발하여, 한국학 전공자를 포함한 러시아 인문학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이벤트성 행사 대신 양국 국민 ‘개인 차원’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다. 평범한 시민의 직장 생활, 가정의 삶, 행복의 기준과 고민 등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호이해가 가능하다. 개인 차원의 교류 기회가 많지 않으면 상대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정형화된 선입견을 갖기 쉬우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우는 이 같은 굴절이 심한편이다. 따라서 편견에서 자유로운 양국 청소년들이 캠프, 교환 방문, 홈스테이 등을 통해 만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양국 국민의 소통에 필요한 콘텐츠가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다. 또한 모니터링

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공백으로 있을 경우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 역사, 정체성,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독자는 관련 도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러시아 인에게 도움이 될 서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모스크바 시내 주요 서점의 외국 관련 코너에 진열된 한국 관련 도서의 종류와 수준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러시아 출판 시장과 현지 한국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영역의 도서 출판에는 우리 측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인문교류는 대부분 정부의 관여나 지원이 없을 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관련 학술 도서나 우리 고전문학의 번역 등과 같은 분야는 체계적 관심이나 재정지원 없이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인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계획 중인 여러 행사와 사업이, 양국 국민들의 삶과 정서, 평범한 일상과 정신적 가치 등을 서로 공감하며 공통의 목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분야 학자들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진정한 인문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김현택,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노어과 교수

#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정말 볼 수 있을까?

올레그 다비도프

2018년은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의 전개에 있어서 특별한 해가 됐다. 무엇보다 일반적 정치풍토가 개선되는 쪽으로 급변했다는 관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균형의 긍정적인 부분은 대립하고 있는 양측(한국-북한 ; 미국-중국)의 노골적인 적대감이 대화 재개로 전환되고, 이 국가들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를 발전시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향후의 비핵화 행보를 약속했다. 이에 화답하여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남북관계에 명백한 해빙무드가 감지됐다. 반년 동안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상호 적대적 수사의 중단 뿐 아니라, 일련의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가져오기도 했다. 서울과 평양은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하고, 비무장지대 인접지역과 서해상의 분쟁 해역에서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했다.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도 이뤘다.

물론 최대의 사건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공고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보에 대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감정적인 스타일로 문자 그대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으며,' 김정은의 성격이 트럼프 자신처럼 '지성, 끈기, 강인함'과 같은 자질들이 결합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과정들을 면밀히 주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해 당사국들이 행한 적지 않은 작업 이후에 향후 평화 과정의 전개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협상 트랙의 상황은 점차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증대되고 있는 대립의 주요 매듭은 미국과 중국 간에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이 이미



일련의 건설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행동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리영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집약돼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양은 계속 비핵화의 여정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무장해제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제조건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 채택과 북·미 간 평화협정 조인이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한 신뢰 구축 없이는 자국의 안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방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간단히 말했다.

위에 언급된 것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한의 전략 노선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 다만 좀더 유연한 전술이 선택됐을 뿐이다. 이러한 전술 수정의 원인 역시 표면에 드러나 있다. 2016~17년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국제 무역과 금융에 참여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엄격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조치는 북한을 경제 파탄 국면에 처하게 했다. 그 외에도 미국 측의 ‘힘의 사용’ 조짐이 더욱 더 가시적이 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수뇌부를 몹시 놀라게 했고, 북한 수뇌부는 일정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에서야 미국의 정치·군사 엘리트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북한

이 핵·미사일 무기를 포기할 진지한 의사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선언은 북한의 교묘한 트릭에 불과하다. 북한의 목적은 ‘평화로운 짧은 휴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패가 좋으면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또한 얻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적잖이 중요한 요소들을 약간 뒤늦게 인식한 미국 정치인들은 점차 분노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이 아주 진지하게 구형 핵 원자로를 이미 세 번째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특히 두드러진다. 북한은 90년대에도(KEDO 프로젝트), 2006~08년에도(6자회담) 원자로에 대해 대가를 받았는데, 바로 지금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안정적인 틀 내에서 상황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유일한 인물로 남아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사실상 그는 워싱턴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북한이 단호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저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물론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카드 패와 대통령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상황을 긍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부라도 고려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굵직한 연설들에서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해 밝혔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진 이후에만 북한은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어떤 행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 수뇌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중 미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한과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동안은 비핵화 실현 기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하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대립 행위와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하면 북·미관계의 균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추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대화의 결렬과 위기, 그리고 백악관이 ‘화염과 분노’ 정책으로 회귀하는 옵션을 결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묵직한 우려가 발생한다.

다른 트랙에서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해빙무드가 관측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수뇌부와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외적인 면으로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첫 화해 행보 이후 동일한 한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몇몇 외국의 대중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결국은 워싱턴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시각이다. 한국의 그 어떤 이전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만큼 한·미 동맹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었던 적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기 바라지만 자신의 야망을 절제해야만 한

다. 이는 국내 보수 야당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워싱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미국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은, 최소한 비핵화 문제에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북한과의 관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수많은 국제적 및 일방적 대북제재이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을 없앤다. 철도 연결 사업, 관광 프로젝트, 공동경제구역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양측 간의 수많은 합의는 거의 항상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사소한 부대조건이 뒤따른다. 이것은 비핵화 분야에서의 상당한 진전과 이에 수반하는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이다.

남북 간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화해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한반도에는 단 하나의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한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상대를 완전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제법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적대적 조직’ 또는 ‘일시적으로 외세의 점령 하에 있는 영토’로 인식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계약 관계나 대규모 장기 협력 프로젝트의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기동과 토대 없이 모

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치·군사적 정세 불안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불안 요인들은 이미 이차적인 성격의 지닌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매우 대륙적인 정치 풍토를 지닌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곳에서는 해병무드가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동결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를 포함한 남한과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기

류가 지금과 같은 높은 점수를 유지할 뿐 아니라 양측의 새로운 건설적인 행보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모순들을 제거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결구도로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일이 과거에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мы видим разрядку в Коре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8.12.2)

#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아태지역의 현재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평가도 제각각이다. 역내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양자 포맷으로, 다자 간 대화로 채택하는 많은 결의들이 때때로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창설됐다. 이것은 미국이 제시한 규칙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국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이 대안적 메가프로젝트로 주시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16개국(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이 연합하고 있다. 결국, 중국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도 탈퇴함)과 미국 없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지역 통합 기구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 참가국 구성원으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유일하게 완전한 거대 지역포럼이다. 그러나 APEC 회

원국들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 선언한 무역 자유화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한 이후, APEC의 과제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이라는 APEC의 장기 프로그램이 언급되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은 역내 국가들의 전략에 달려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APEC을 포함한 거대 지역적이며 세계적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들과 양립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아태지역의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대외경제 정책의 무기로 몇몇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개념을 발의했으면서도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지 않고, '일대일로'라는 자국의 메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잠재적 참가국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양자 관계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자국의 대

외경제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정치적 성격의 문제들(중국의 파트너 국가들의 부채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 확대에 대한 경계심 고조)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 행위로 복잡해진 중국의 대외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다른 기구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촉발된 경제·무역 분쟁의 첨예화는 최근 수년 동안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측의 경제적 압박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새로운 대외경제 관계 노선을 찾도록 부추기고 있다. 2018년 5월에 아베 총리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2018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의에서 중국과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인도를 포함한 다른 참가국들은 제2, 제3의 경제적 입지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변화가 단지 대화의 활성화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경우 16개국의 대외경제적 입장이 좁혀지고, 이것은 분명히 APEC 회원국들이 뉴기니 정상회의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8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의제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외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로젝트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명시됐다. TPP에 관심이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 같은 굵직한 파트너의 '게임 탈

퇴'를 상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새로운 조건에서 역내의 문제들을 해결할 집단적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국가들이 다낭 정상회의(2017년 11월) '장에서' 선언된 사항, 즉 11개국이 미국 없는 TPP 구상(이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실제로 구현할 준비를 계속하리라고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대화 참가국들은 위에 언급된 메가프로젝트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일본의 생각대로 TPP-11을 TPP-12로 재건하거나, 심지어 더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11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단기 행동 '로드맵'을 채택하는 것이다.

2017년 하노이 정상회의 이후의 기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은 APEC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사회단체, 상업단체들에 의해 수집 및 가공되고, APEC이라는 총괄적 형태로 제공되는 통계·정보 데이터, 기본적인 도전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요구된다. 또한 APEC은 대화의 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한다. 국가와 정부의 수장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TPP 실현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단계에 있고, 논의 중에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윤곽은 여전히 희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이 상반된 국가들 사이의 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APEC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TPP와 RCEP뿐 아니라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도 APEC의 틀 밖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실이 APEC의 중재 기능을 촉진한다. 이것은 APEC 회원국들에게 외교적 해결 방법을 위한 대화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의사일정에 잔류할' 가능성을 준다. APEC이 현재로서는 전체 규모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PEC은 역내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 플랫폼이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FTAAP 건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PEC의 대화 과정은 아태지역 통합과정의 미래를 제시하고 최우선 사항들을 진척시키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객관적인 가능성과 이해관계가 주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APEC을 포함한 다자간 포맷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APEC은 특히 중요하다. 역내의 새로운 경향은 러시아의 경제 정책이 APEC에서 진행되는 협력 조건과 전망에 대한 토론의 범위 안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그것을 고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 분야, 기술 이전 등의 협력에 관한 법률적 문제의 해결이 실제적 현안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이 양자협상에 중점을 두면서, 양자협상의 틀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워싱턴이 한-미 FTA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그런

데 역내 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접근권 보장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태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 십 년 동안 미국의 요구에 맞춰져 왔던 기술표준 확립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왔다. 최근 수 십 년 동안 세계적 표준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의 수가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한국, 중국, 아세안 국가들의 기여로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증가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것은 러시아에도 이득이 된다.

생산 과정의 사회적 측면이 토론의 단골 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역내에 널리 퍼져있는 양성불평등 문제, 중장년층과 장애인 고용 문제, 대도시와 지방 주민 간의 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대 기술의 확산이 때로는 기존의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에 언급된 범주의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질 향상 교육을 받는 데에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혁신적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일에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어려움이 태평양 지역의 분열을 초래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경제적 착취 경향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문제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역내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의 상관관계라는 주제와 얽혀있다.

2018년 11월에 열리는 역내 정상들의 만남에서 러시아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제는 국내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대외경제 문제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더구나 2018 뉴기니 APEC 정상회의의 의제에 디지털 경제발전이 최우선 순위의 주제에 포함됐다. 게다가 아태지역의 현대 광산업의 발전 전망,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능성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논의에 부처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모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APEC 사무국의 후원 하에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사안, 즉 21개국 전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의 디지털 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들을 준비할 가능성을 지지해야 한다. 개별 국가 간의 격차가 현대적 혁신 기반에 근거하는 통합 과정의 전개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답을 찾으려는 의도로 정의될 수 있고, 미국이 (최소한 지금은) 지역적 차원이 아닌 양자 관계 차원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특히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과' 사실상 '단절'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것은 이 국가들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거나 또는 대규모 불황 지역들이 출현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위협적인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는 사회적 긴장이 축적된다. 이것은 노동분쟁, 민족분쟁, 종교분쟁이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분쟁의 형태를 띠 수 있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여

건들에 관한 권고안을 준비하고 조치를 제안해야 할 타당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회적 성격의 조치들에 별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 부류의 주민들, 즉 필요한 지식이 없는 여성과 청년층, 장애인, 정년을 앞둔 연령대의 사람들, 직업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과 침체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 교육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는 선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적인 성격의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과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러시아의 입지는 디지털 경제라는 중요하지만 다방면적인 주제에 집중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안전들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APEC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었지만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 전략적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실용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다낭 APEC 정상회의의 결의사항과의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다. 제안되는 접근법은 균형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낭에서 선언된 것이지만, 여전히 시급한 사안이다. 역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평등 보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청년층, 장애인 및 여타 범주의 주민이 디지털 경제 잠재력과 경제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경제 발전에 자극을 부여하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는 것은 APEC 정

상회의에서 수차례 언급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접근성 보장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 디지털 경제가 요구하는 것도 고려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의 위험을 감소시킬 시스템의 조화가 의제로 제시될 수 있다.

역내 양자 간 파트너십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자면, 러시아는 양자 협력의 방향이 APEC의 국제협력 목표와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아태자유무역시대(FTAAP)의 기본 원칙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지지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

다. 역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FTA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과정을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2020년 이후의 APEC의 활동 컨셉트를 수립하는 임무를 띤 'APEC 미래 비전 그룹'의 기능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태 지역 내 경제과정의 난기류 상황에서도 APEC의 대화 메커니즘이 유지된다면 역내 경제구조 개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필요하다면 경제협력의 실제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역내 국가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ovskij) 경제학 박사, IMEMO 아태지역 책임연구원
- 원제 :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АТЭС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8.12.2)



# 미·중 관계의 위기와 ‘글로벌 경영’의 전략적 위협 요인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최근 몇 달 간 중국 정치발전 요인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여름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줄곧 우위에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선전기구는 중국 군부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 강화, ‘애국심 고취 선전 적극 시행,’ ‘애국투쟁 정신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미 무역에서 나타난 긴장 고조는 바로 이러한 ‘애국심 강화’ 선전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을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강조점도 변해서 대미 관계의 악화가 중국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당 선전정책에 반대하며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지식인에 대한 사상적 탄압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일종의 ‘굴복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선전 책임자로 왕후닝을 임명했다.

지난 9월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천억 달러(중국 수출의 약 40%에 해당) 상당의 수입

관세를 인상한데 이어 약 700억 달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자 중국이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미국의 관세공격으로 중국이 ‘체면’을 잃게 되면서 양국관계는 시진핑과 트럼프 이전의 ‘전략적 불신’ 시절로 후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600억 달러(미국의 대중 수출의 약 45% 해당)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소위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나 중국 경제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미국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8년 GDP 성장률의 0.5%~1%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 지도부는 언론이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마찰’이

라고 부르고 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미·중 어느 한 쪽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중국은 이를 원치 않으며, 상호 윈윈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또한 중국은 자국의 수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9월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강경정책이 상당부분을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 의회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중국이 11월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미·중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양국관계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긍정적인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양국 교역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중국 압박 요소를 활용해 새로운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묻히고 있다.

셋째, 중국은 자유무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대미 무역손실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찾고자 할 것이다. 우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동맹국인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현재 중국은 16개국과 자유무역협상 체결) 체결을 위해 활발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노력은 역효과도 함께 불러오고 있다: 즉 EU에서는 중국이 유럽 항구의 주도권을 쟁취함으로써 유럽 내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9월 인도와의 전략

적 회담을 시작으로 인도를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대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중국 자본에 맞서는 균형을 만들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잠정적으로 인도까지 포함하고,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태지역 전반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등,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안을 마련 중이다.

넷째, 중국 정부는 중국 지방이 안고 있는 ‘악성 부채’ 해결, 금융시장 개방, 지방 국영기업 개혁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특단의 조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자비로운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자국 및 외국 수출기업의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말에는 중국이 러시아제 신형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할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조치(이미 관세 차원을 넘어섰다)로 맞서면서 이것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제재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밝히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중국의 거센 반발을 피하지는 못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제동을 걸면서(9월말 중국 해군 수장의 미국 방문 취소) 관세같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으나 안보 제재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새로운 대미관계의 악화 요인은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경제·군사협력을 추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가을에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내심 러시아가 자극받기를 바라며, 이미 과거에 언급한 ‘빙상실크로드(ice silkroad)’ 즉, 북방항로를 자국

의 글로벌 인프라 전략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첫째, 최근 들어 미·중 무역관계는 상당부분 곧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선거 결과(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따라, 11월에 있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확정될 것이다.

둘째, 러·중 군사협력이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기업들은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더욱 조심스러할 것이다. 그 경우 '우산' 브랜드 기업을 세우는 관행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분야 전략게임에서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는 데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9월 28일) 있었던 중국 국방부장의 발언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국방부장은 미국을 특정하여 러·중 전략적 군사훈련의 항시적 실시 여부 문제는 '상황에 따른 요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을 둘러싼 미·중의 행동을 보면, 소위 '글로벌 경영'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다자체계의 분쟁 해결(예를 들면 WTO)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 이를 잇는 일방적 보복조치, 양자 체제의 고착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굳건한 조직(예, EU 혹은 아직 미완성체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TP-12)을 갖춘 새로운 통합 포맷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일대일로' 혹은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식 대안과

같이 개별적 방향과 문제를 다루는 보다 유동적 형태의 경제·정치 협력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핵문제 6자회담 체제를 대신해, 한국, 미국, 중국 각각이 평행선을 그리듯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은 '글로벌 경영'이라는 전통적 체계가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과거의 전통적 체계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국제관계의 고착화, 보수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강제적 성격의 경제·정치 포맷을 만들자는 요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본 맥락에서 '자기 경영'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됨) 강제성은 약화되고 자율성은 강화된 이른바 '자기경영 포맷'에 참여하거나 혹은 탈피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리더들의 전략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포맷도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한편, 현재의 새로운 상황은 러시아에게 또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대미 무역 적자를 보완하려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프로젝트 혹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 연결' 구상이 최대한의 융통성과 최소한의 관료주의를 지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 Кризис в отношениях Китая и СШ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угрозы «глобаль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12.02)

# 한러 경제협력 전망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제재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경제협력 국가를 확대해야 한다.
- 극동지역을 필두로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모색해야 한다.
- 러시아의 정책 '동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와 협력관계를 구축·발전시켜야 한다.
-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기업들이 구축한 동북아 밸류체인에 극동지역을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한러 경제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이다. 그동안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협력의 ‘확대,’ ‘심화,’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관료들의 진부한 발언이 가져온 효과는 극히 미미할 뿐

이며, 현재까지 그 답은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의 전망이다. 간단히 말해,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 예상 이윤은 잠재적 리스크와 손실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인 가이다. 민간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분야, 따라서 한러 경제협력의 잠재적 확대를 논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소비 분야다. 필자를 포함해 전문가 및 러시아 기업인의 99.9%가 한국의 민간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러시아 민간소비 분야로 한정해 기술하겠다.

러시아 민간소비에 대한 필자의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중·단기 전망으로 볼 때, 한국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인의 구매력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9.1.1 부가가치세 인상
- 2019년 유류세 인상

- 주택공공서비스 지불(요율)인상
- 부동산세 인상(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 2019년 루블 평가절하 예상
- 기타 간접세 인상 및 증가

위의 사실을 감안하면, 첫째, 인플레이션 증가, 둘째, 러시아 국민들의 총 소득대비 지불 증가 및 이로 인한 소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보상 능력과 보상 의지를 보여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이 소비 진작이 아닌 긴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 실질소득감소
- 소규모 대출 증가
- 저축 감소 및 소규모 대출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의 미미한 증가

결론 - 중·단기적 전망으로 볼 때, 민간소비를 통한 한러 경제협력 확대는 어렵다.

한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주요 전략 추진과 관련된 러시아정부의 소비분야에 있다. 공기업 을 비롯해 러시아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은, 이른바 ‘5월 명령’이라고 불리는 2018년 5월 7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제204호 ‘2024 러시아 연방 목표 및 전략과제 프로젝트’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 보건(혁신 의료기술 도입 외)
- 교육(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외);
- 건설(설계 및 건설분야 혁신기술 도입,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 외)

- 환경(각종 폐기물 재처리 외)
- 도로 건설(도로 운행 자동화 및 로봇 기술 도입 외)
- 노동 생산성(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진 경영·조직·기술 솔루션 도입 외)
- 학술(학술연구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교구의 현대화 외)
- 디지털 경제(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보관 외)
- 국제 경제협력(철도·도로·해상을 통한 수출의 물류 제한 철폐,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통합시장 완성 외)
- 인프라(‘서쪽-동쪽’과 ‘북쪽-남쪽’ 물류노선 개발, 러시아 항구 수용력 증가, 북방항로 개발, 멀티모달 화물운송 허브 및 교통물류센터 구축, 화력·원자력·수력 발전소 현대화 포함 중앙집중 에너지 시스템 외) 개발(한러 경제협력 확대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다).

중·단기 전망으로 볼 때, 실질적인 유효 수요는 위의 분야들에 집중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세금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다름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월 명령’에 따른 프로젝트 실현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5월 명령’에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러시아는 주요 전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장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장비나 부속이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해당 장비들은 해외 공급기업 혹은 수입 대체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수입 대체의 경우, 해당 수요에 맞추려면 전체 생산라인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리브랜딩(rebranding) 혹은 재포장 등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장비·부품 공급업체의 역할이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중국제품이 선호된다. 그러나 기술 의존도를 우려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이나 부분적으로 일본 등으로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 제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건설 예정인 러시아 역외구역(극동 루스키 섬, 칼리닌그라드 주 악차브리스크 섬) 등 극동지역의 기존 인프라 및 건설 중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러중 경제협력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경제협력(상품 교역)의 공간은 현재 새로운 형태, 즉 공동과학연구, 초국가적 전자무역 플랫폼, 지불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러시아 결제대행서비스 '안덱스.머니(yandex.money)'가 한국 온라인 마켓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2차 제재로 불리는 미국발 제재·정책이라는 큰 위협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 관련 한러 협력은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째, 러시아 대외 정치적 이해관계는 전략적 안정이란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즉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개발,' 러시아 카프카스의 사회안정·안전 지원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러시아 민간기업들

은 북한의 취약한 경제 구조, 시장경제 시스템 및 기업 보호·보장 시스템 부재로 인한 고부담 리스크로 북한관련 사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러시아 민간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 할만한 여유자금이 없다. 게다가 대형 공기업의 사업 방향은 '위'로부터 오는 정치적 결정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비롯한 프로젝트 우위는 외국이 아닌 러시아에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러 경제협력 확대에 '북한'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치·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러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은 분명 존재한다. 중·단기적 전망으로는 러시아 경제발전 전략 프로젝트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 및 북한과의 협력분야다. 러시아는 한러 협력 확대를 촉진할 인프라, 즉 선도 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향후 러시아 역외구역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 확대에 보다 큰 잠재력은 공동 과학기술 개발, 국제전자무역플랫폼 및 결제시스템 등 새로운 경제방향에 있다. 그 외, '2018-2024극동 무역·경제투자분야 러·중 경제협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공동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12.02)

---

# 아태지역 내 다양한 포럼들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

2018년 11월 중순은 역내 경제관계 현안이 여럿 논의된 일련의 국제 포럼이 아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개최된 시기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블룸버그사가 주최한 신경제포럼(New Economic Forum)의 뒤를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차례로 개최됐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APEC 연례 정상회담이 열렸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수준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중요한 기능은 포럼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포럼에 맞춰 이루어지는 각국의 정상회담 개최이다. 예를 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와 인도, 한국, 일본 정상들과 리커창 중국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APEC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을 방문했다.

동시에 이번 포럼들은 국제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뒀다. 1994년에 채택된 보고르 목표는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과제들은 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포럼

들의 결과로 내릴 수 있는 주요 결론은 역내 리더십이 위기를 맞이했으며, 아태지역 내 메가 프로젝트 실현이 침체됐다는 것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양자 협정과 구체적인 개발 프로그램이다. 2순위는 주로 소(小) 지역적 의미를 갖는 다자간 조약이다. 중국과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미국 없이는 그 가능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며 아직 협상 단계에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구축까지 갈 길이 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대(大) 지역적(mega-regional)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들은 3순위에 불과하다. 침체된 APEC의 활동을 증명해 주는 것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충돌로 인해 2018년에 APEC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통상적인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사건이다.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전략적 성격보다는 전술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에게 여전히 중

요한 것은 대중 관계의 발전 문제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PP 차원에서 아태지역 내 경제 관계를 조정해 줄 관련 법적 메커니즘을 도입해 이에 중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미국이 통제하는 역내 경제 관계 속에 통합시키고자 시도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통상 협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나 일본 등) 일련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 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미국에게 최적화된 세계 첨단기술의 협력 조건을 구축하려는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양자 협정을 기반으로 마련된 법, 경제, 행정 규범은 향후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따금 참여를 허용하는 TPP와 같이) 보다 더 광의적 협력 포맷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양자 협상의 참가국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선택적 접근법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의 영향으로 좌우된다.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들은 미국과 동맹 협정으로 묶인 국가들이다. 현 상황에서 경제협력 발전 문제는 미국의 대태평양 정책 내에서 미국의 군사·정치 우선순위의 보장과 긴밀히 결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인 대 아태지역 노선을 마련하고자 할 때, 전략적 동맹국들의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과 동시에, 2014년부터 인도와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동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차원에서 동맹국들과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과의 협력 속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간 전면적인 관계 발전에 방점이 두어진다.

다. 민주 국가들과 대외정치 노선을 조율하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외교적 해결책 모색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의 아태지역 경제 관계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상황 변화를 위해 공조에 나선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5~6년 후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적인 인도 경제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교통 인프라 현대화, 델리-뭄바이, 첸나이-벵갈루루를 잇는 '산업 회랑' 구축 프로젝트, 기타 산업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목표로 일본은 여러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도 내 일본 민간기업들의 대외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역내 리더의 지위를 놓고 미국과 상대할 능력이 있는 실질적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스스로가 리더십의 짐을 떠맡을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에서조차 중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제 통화로서 위안화가 갖고 있는 제한적 역할, 미국의 수준과 질적으로 비교될 만한 대출·금융 서비스 제공 능력,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 세계 리더국가들의 수준으로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없는 과학·기술 잠재력 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14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듯이, APEC이 주도하는 FTAAP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아직 전문가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도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역내 및 글로벌 프로젝트 구축에 대대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른바 '일대일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제안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역내 국가들에 의해 양가적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불신되기도 한다. 주로 제기되는 비난은 채무국에 불리한 금융 조건과 현지 생산업계에는 손해를 끼친 채 최대한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력)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좋지 못한 경험은 중국이 떠안는 유일한 손실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실제로 중국이 자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금융 수단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비난 때문에 역내 국가들 속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훼손되고, 잠재력 리더십은 약화된다.

그 결과 빠른 시간 안에 중국이 리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최소한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메이드인 차이나 2025' 프로그램의 기본 조항 이행과 새로운 여건 하에서 중국과 역내 국가들 간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심지어 가장 긴밀한 동맹국들 사이에서마저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리더십 재가동 정책 속에서 이런 상황은 아태지역에 불확실성만 높여줄 뿐이다.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심화되는 이유는 미중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통상 갈등 요인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적 경쟁 강화를 우려를 하는 정치적 모순들도 존재한다.

메가 프로젝트 실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양자 수준이나 혹은 개별 프로그램 차원에서 역내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적 이니셔티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New economic map initiative)'과 그 실현 방안으로서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검토될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양 및 아프리카 진출 전략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강대국들과 개별적인 관계 확대에 주력한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의 우선순위는 전혀 동일하지 않지만, 자국 문제의 해결책을 국제적 맥락속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이들을 한데 묶어주는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각국의 정·재계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및 역내 프로세스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협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신경체포럼 개최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여러 전·현직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포럼에서 발표된 목표는 매우 야심차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부가가치사슬 등의) 현대 기술 개발의 후유증을 논의하고, 미중 경제·통상

갈등 속에 아태지역의 상황을 평가하는 등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니셔티브들이 제기하는 경제적 요구는 개별국의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벗어나 공식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국가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까지 포함시켜 지역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껏 개최된 포럼들은 기업들과 역내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아

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러시아는 자국의 역량과 대외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새로운 협력의 틀을 조율하면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제안함으로써 자국의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ovskij)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부장
- 원제 : Российский взгляд на итог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орумов в АТР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11.27)

# 동남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예브게니 카나예프

본고에서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미치는 영향력의 특징을 밝힌다. 아태지역의 경제 지역주의가 갖는 특성이 소개되고, 동남아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 궤적이 AEC 형성 전후로 다뤄지며, 경제협력이 디지털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밝힌다. 필자는 AEC가 아태지역에서 여전히 단일한 협력 파라미터를 갖춘 몇 안 되는 역외 영토 중 하나이나, 향후 AEC의 경쟁력을 증대하는 문제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아세안의 대응과 직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키워드 : 아태지역, 다자간 협력,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디지털 경제, 제4차 산업혁명

아세안경제공동체(AEC) 형성에 반영된 동남아시아의 경제 지역주의는 아태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들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EC 발전과 관련해 아세안이 앞으로 성공을 거둘지는 아세안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 현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오늘날 아태지역의 경제 지역주의

오늘날 아태지역의 경제 지역주의 발전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역·투자 자유화의 어젠다 고갈과 역내 상호연계성 증대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기존에 가동된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들이 제자리걸음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

정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재적 성과에 대해 아태국가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소진되고 있다.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시기는 2000~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자간 FTA 체결 건수가 많아(아태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쓰이는 표현에 따르면 '스파게티볼') 여러 다자간 이니셔티브의 실현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전문가들이 언급해왔던 것처럼, 그 결과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단일한 경쟁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단편적인 협정의 '줄무늬'가 나타나게 됐다. 발전된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효율적 제도, 높은 인적교류 수준 등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부재함으로써 양자뿐 아니라 다자간에 체결된 FTA가 실질적 이행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요소를 갖춘 신규 협력 어젠다에 대해 아태국가들의 요구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APEC 회원국 중 선진국은 201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보고르 목표의 첫 번째 파트가 미미한 결과를 내면서 이같은 요구는 거세졌다. 그 결과 아세안과 APEC이 회원국들 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경제 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중인 소위 '역내 상호 연계성 증대'가 두드러진 협력 방향이 되었다. 그 예로 2010년과 2016년에 채택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두 건과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APEC 연계성 청사진이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중심으로 이미 조율되어 마련중인 경제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에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양질의 포괄적 협력' 사례인 TPP는 더욱 노골적으로 미국의 아태 리더십 지향을 위한 볼모로 변모해가는 등 정치화된 성격을 띠게 됐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아태 지역에서 리더십 야욕을 제도적으로 지탱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이론적으로 TPP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TPP 참가국들 간 양자 협력 활성화다. FTAAP에 대해 말하자면, 기존의 FTA 참가국들 간 이익 경쟁과 역내 다양한 종류의 법적 틀이 동 이니셔티브의 형성을 가로막는다. 독자적 협력 참가국으로서의 대만과의 협상 실시가 중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아태 지역의 경제 지역주의 발전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준다. 대표적 사례가 아세안이다. 아세안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항만 산업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더욱이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 활성화는 예상대로 일본과 한국, 인도의 적극성을 촉진하고 있고, 그 결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투자 및 기술 유입처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정치적 여파는 아세안의 향후 계획에 모순이 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안보'와

‘개발’ 개념을 통합하며 독자적 대륙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의도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 결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태 지역의 안보 보장을 위한 아세안 중심의 대화 포맷이 예상대로 소외될 것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유는 아태 지역과 아세안 간 다자간 역내 프로젝트의 ‘원동력’인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둘러싸고 아세안과 그 파트너국들 간 협상 타결이 눈에 띄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RCEP 공식 협상은 스무 차례 열렸고, 협상 타결 기한은 두 차례 연기됐다.

아태 경제 지역주의와 관련한 주요 이니셔티브의 불투명한 향방 속에서 AEC야말로 결함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완전한 경제 공간으로서 나설 수 있다. 아세안은 독특한 단계적 스타일을 고수하며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다자간 프로젝트로서의 AEC

동남아 국가들의 기존의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AEC 프로젝트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유럽의 통합 경험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했던 ‘5개국’, 이후 ‘10개국’은 이러한 협력 출범에 있어 유럽과 동남아가 출발 조건과 협력 발전의 맥락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럽 경제공동체(ECC)는 초기에는 경제 기구로 여겨졌고, 이후에 정치 요인이 ‘끌어들여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아세안은 처음부터 동남아 내 공산주의 전파 불허라는 정치적 과제를 설정했

고, 경제 프로젝트들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시작됐다. 로마조약 조인을 앞둔 유럽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반면, 방콕협정 서명을 앞둔 동남아에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아세안의 참가국이 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군사적 대립 상태였다. EU의 이민 정책이 실패하고, EU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브렉시트까지 발생하자,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럽의 경험에 선택적으로 접근해 이를 동남아 현실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오로지 강화하기만 했다.

협력의 전형으로서 실용주의를 최우선시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경제와 안보 부문의 정책을 통합시켜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필요할 때 이를 분리해오기도 했다. ‘칸수 보고서’에 드러난 경제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은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 선언(ZOPFAN) 채택과,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가동에 대한 결정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구축 계획 발표와 맞물렸다. 아세안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 Agreement - ATIGA) 서명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확대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출범과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아세안은 정치와 경제 사이의 경계를 매우 제한적으로 나눠왔다. 예를 들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동시에 서명됐다.

AEC를 향한 움직임은 아세안이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했던 1997년에 시작됐다. 2003년에 아세안은 AEC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4년 후, 설립 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겼다. AEC 청사진 2015는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 기반 형성
- 아세안의 '경쟁력 있는 경제권'으로의 변모
-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동등한 발전 조건 제공
- 글로벌 경제 프로세스로의 아세안의 통합

세 번째와 네 번째 목표의 이행률은 100%,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의 이행률은 각각 92.4%, 90.5%라고 밝힌 아세안은 '원활한(seamless)' 동남아 경제 공간 구축의 길에서 있는 객관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10개국' 간 인프라 발전 격차가 있다. 서비스 무역 자유화는 노동자들 중 고작 1.5%만을 아우르고, 나머지는 활동의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사회 보장 측면에서도 여전히 '회색 지대'에 남아있다.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 간 격차는 2위(싱가포르)에서 171위(미얀마)까지 엄청났다.

아세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 노력을 집중한다. 첫 번째 방향은 아세안의 미래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아세안은 AEC 설립 시기를 2025년으로 늦춘 후, AEC 청사진 2025에 '글로벌 아세안' 장을 추가하는 등 협력 부문을 4개에서 5개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부문의 본질은 대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마련하며, 역내 및 글로벌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프로세스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에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아세안 내부 협력 최적화다.

2016-2017년에 채택된 AEC 실현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들을 정리해보면, 모범규제관행과 조세 협력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인 아세안 모범규제관행 작업계획(ASEAN Work plan on Good Regulatory Practice)과 아세안 조세 협력을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 2016-2025(Strategic Action Plan 2016-2025 for ASEAN Taxation Cooperation)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2월에는 AEC 2025 통합 전략 행동계획(AEC 2025 Consolidated Strategic Action Plan - CSAP)이 채택됐고, 그 목표는 AEC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 8월에 아세안이 채택한 무역 원활화 기본 협정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월에 아세안 경제장관들은 2020년까지 무역 거래비용을 10%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통상정보 저장소(ASEAN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 관세 검색 엔진(ASEAN Tariff Finder), 아세안 무역 원활화 지수(The ASEAN Seamless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 ASTFI)가 구축됐다. 이는 '10개국' 간, 그리고 아세안+1 포맷을 통한 아세안과 파트너국들의 교역을 용이하게 해 준다. 아세안의 여러 경제 협정 실현 시 회원국 기업 간 국제 협력 문제를 조율하는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아세안 투자·서비스·무역 솔루션(the ASEAN Solutions for Investment, Services and Trade - ASSIST)이 구축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아세안 내부의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세안 지재권 포털(Intellectual Property Portal)과 아세안 전자 상거래 조정 위원회(ASEAN Coordination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 – ACCEC) 이니셔티브고, 이런 이니셔티브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들 간 경제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아세안 통합구상 작업계획 II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을 채택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식량 생산, 농업, 교역 부담 완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발전, 교육, 보건, 국민 복지 향상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에 아세안은 아세안 포용적 비즈니스 기본 협정(ASEAN Inclusive Business Framework)을 제안했다. 본 협정의 목표는 동남아 국가들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영리 기반의 상품, 서비스, 사회적 혜택 제공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AEC 형성 과정에서 과학, 기술, 포용적 성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10개국’의 의지를 담은 아세안 혁신 선언(ASEAN Declaration on Innovation)이 채택되었다는 사실도 빠트릴 수 없다.

아세안이 극적인 돌파구는 없지만 꾸준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AEC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제4차 산업 혁명이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아세안과 제4차 산업혁명 : 기회와 도전

제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런 기회와

도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회에 대해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자본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영업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동 기반은 양질의 서비스나 고부가가치 상품이지, 생산업이 될 리가 없다. 여러 글로벌 경향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속 저널리즘이나 리얼리티쇼, 별난 비디오 블로그와 같은 오락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오늘날 지적 재산 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에 대한 수요는 형성되지 않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동남아 중소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확대됐다는 사실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이 동남아 내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서 99%고, 고용의 52%에서 97%까지 담당한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말해준다. 중소기업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동남아 밖에서도 신규 투자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자연재해 예측 및 그로 인한 피해 제거 능력이 제고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로 인한 피해 해소 대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파탐지기를 통해 산사태에 매몰된 사람들을 수색할 수 있을 것이고, 드론을 통해서도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동남아 농촌 지역에 있어 중요하다.

위기에 대해 말하자면, 제4차 산업혁명은 아

세안으로 하여금 기존의 '성공 신화'에 비견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현대화의 근간을 이뤘던 수출지향 산업의 많은 요소들을 온라인 관리 체제로 옮겨놓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의 평가에 따르면, 생산 자동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는 각각 60%, 73% 줄어들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일자리 중 약 60%가 자동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는 섬유, 의류 및 제화 산업에서 각각 64%, 86%, 88%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소매업 일자리 중 각각 68%, 71%, 85%, 88%가 자동화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선진국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로 생산 시설을 옮겨왔던 전통적인 '아시아 경공업'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향후 3D 프린터의 발전을 통해 생산 기지로부터 인접한 곳에서 필수 부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비용이나 기타 '아시아 경공업'의 특성을 통한 투자 및 기술 이전과 노동자 숙련도 제고 등 동남아의 생산 현지화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상기 문제들로부터 실직자들의 주의를 돌려야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오락 산업 종사자들이 이 작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제4차 산업 혁명의 수혜자 수를 늘림으로써 해고 노동자들의 더욱 큰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고, 앞날이 캄캄한 수많은 실직자들은 사회 시위로 쉽게 동원될 수 있고, 그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경제

의 혜택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현재 동남아 국가들 간 격차가 여전히 너무나도 크다는 점이다. 미얀마와 라오스 인구 중 26%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동남아 평균치는 53%). 동남아 인구 중 약 70%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중 5%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데, 회원국들은 이를 막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못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 지역의 전자 상거래 규모는 경쟁 상대에 크게 뒤처진다. 현재 동남아의 온라인 판매 규모는 90억 달러로, 1인당 14달러 수준이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규모는 4260억 달러로, 1인당 327달러에 달한다. 동남아 국가들에는 세계 IT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다. 평가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PPC(Pay-per-click) 광고의 90%를 운영하고, 페이스북은 SNS 트래픽의 77%를,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5%를 차지한다. 부분적이라도 이에 견줄만한 능력을 갖춘 기업이 아세안에 생겨날 가능성은 낮다.

동시에 아세안은 독자적인 지역주의 프로젝트들의 향후 발전 노선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기업들은 완제품의 수출입 대신 상품 가상화(virtu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품의 디자인을 거래하고 필수 부품을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한다. 이는 아세안에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한 아세안 회원국이 가상 상품을 구매해 자국에서 인쇄한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교역과 같은 분야의 조화를 어



떻게 이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시 의료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상호 인정 협력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에 포함되는 노동자 비중은 고작 1.5%고, 이주 노동자들 중 87%가 비숙련 노동을 담당하며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시간 압박 속에서 숙련 노동자 비중을 끌어 올릴 것인가? 가상 상품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조세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AFTA나 ATIGA와 같은 아세안 경제 지역주의 프로젝트들의 법적 기반은 얼마나 자주 수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아세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팔로어(follower)로서 편입되고 있다. 현 좌표에서 아세안의 자원은 근시일 내에 단일한 지경학적 공간으로서의 동남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회원국들 간 온라인 경제 접근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필수 자원을 끌어 올리기에 불충분하다.

## 결론

아태 경제 지역주의가 보이는 최신 경향들의 성격을 보면, 이런 경향은 통합된 역내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프로젝트 및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전함에 따라 아태국가들 간 관계가 양극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더해 보면, 다자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실현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AEC는 여전히 통합된 장이 구축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 중 하나다. 바로 이로부터 국가나 다국적 기업 등 경제 플레이어들이 AEC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AEC의 향후 발전 여부는 아세안이 AEC의 조정자로서 얼마만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고, 회원국들 간 기존의 개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 과제의 이행이 아세안의 중·단기 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예브게니 카나예프(E. A. Kanaev) 역사학 박사,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원제 : Цифровой этап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лизма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 출처 : IMEMO 발표 논문(2018.12.02)

# 시진핑 정책과 ‘천하’ 사상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초록: 현대 중국 정치용어사전에 기슬때 있는 ‘천하는 모두의 것이다’(천하 위공 天下爲公)라는 중국의 전통사상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계획과 연관된다. 전(全)세계 국가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과거의 ‘대동’ 개념은 국제관계를 재편성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한다. 다른 나라에 자국의 관점을 강요하는 서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의지와 자국 전통문화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바깥세계에 알리려는 바람 사이에서 중국은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고대 사상을 현대 중국정치에 폭넓게 활용하려는 경향은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시진핑은 보고에서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다(대도지행 천하위공 大道之行 天下爲公)’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고대 중국 『예기(禮記)』 ‘예운’ 편에 나오는 이 말은 이상국가인 대동(大同) 사회를 묘사하는 글의 일부이다.

당 대회 보고서의 마지막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장이다. 이를 통해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자국의 전통문화에 기반 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내용

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A. V. 비노그라도프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이 인용한 소강(小康)사회보다 질적으로 더 고양된 사회 형태라는 것을 섬세하게 교시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이론 공식, 현실화할 수많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마추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중국 내외에서 ‘천하위공’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아카데미 소속 류재준은 시진핑이 연설에서 언급한 천하위공

사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첫째,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천하위공’의 정신 아래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작은 이기심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런 시진핑의 요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고 그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2013년 6월 25일 연설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둘째, 2016년 4월 26일에 있었던 지식인·모범 근로자·청년대표와의 만남에서 시진핑은 “‘천하위공’ 사상을 따르고 도덕원칙(담당도의 担当道义)을 준수한다는 마음가짐이, 역사적으로 항상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에 강한 책임감을 지녔던 중국 지식인의 내면적 장점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셋째, ‘천하위공’은 국제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는데 있어 사상적 기반이 된다. 2014년 7월, 라틴 아메리카 지역순방에 앞서 이 지역 4개국 대 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대도지행(大道之行), 천하위공(天下爲公)’이란 구절을 언급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말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인민들은 공평정의(公平正義)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중국의 목표임을 밝힌 것이다. 국제관계의 다극화, 그리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인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세계 운명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시진핑은 또 다시 ‘대도지행(大道之行),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말을 썼다. 시진핑은 평화·발전·공정·정의·자유는 전(全)인류의 보편가치이며 또한 유엔정관이 지향하는 숭고한 목표라고 천명했다. 이 연설에서 중국 실권자 시진핑은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구축을 주창하였는데,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최고지도부 차원에서 ‘천하위공’ 사상과 대외정책의 핵심적 이니셔티브로서 ‘운명공동체’ 구축이 결합된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이전, W. A. 버지니아는 이미 “전통적 정치언어인 ‘천하위공’ 사상이 현재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왜냐하면 ‘급격한 정치개혁과 사회분열로 인해 유발된 중국 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상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이렇듯 천하위공 사상은 중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중국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다. 강력한 글로벌 리더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새로운 개념적 기반 위에 자국 대외정책을 가다듬고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2017년 12월 1일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세계정당과의 대화’의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시진핑의 연설이다. 여기서 ‘천하위공’과 ‘대도지행’ 사상이 확실하게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연설의 핵심주제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국식 개념이었다. 시진핑은 중국 민족이 ‘긴 역사와 빛나는 문명’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중국은 혹독한 시험에 맞닥뜨렸지만 중국인민은 운명에 굴하지 않았으며 긴 투쟁 끝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행할 대로’로 나왔다는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5천년이 넘는 중국문화 발전 기간 내내 ‘중화민족의 궤 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문화 유전자’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주장이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화민족은 ‘천하가 한 가족(천하일가 天下一家)’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인류는 동포이며 만물은

뗏(민포물여 民胞物與)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화합(협화만방 協和萬邦)하는 천하대동(天下大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도지행’과 ‘천하위공’의 아름다운 세계를 분명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맥락 하에서 국가들 사이에 현재 요구되는 바람직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천하일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중국 전통사상을 전(全)세계적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저는 국가들 간에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서로 뒤섞일 수 없는 요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양태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 제 국가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들은 ‘천하일가’ 사상을 수용하여 팔을 벌려 서로를 껴안고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으레 전통문화유산을 인용하곤 한다. ‘민포물여(民胞物與)’ 사상은 송나라 성리학자 장재(張載)가 쓴 ‘서명(西銘)’의 한 구절, “모든 사람은 모두 한 배에서 난 형제이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 짝이다(민오동포 물오여야 民吾同胞 物吾與也).”에서 유래했다. ‘협화만방(協和萬邦)’ 사상은 고전 중의 고전 『서경』에 나온다. 이런 말들은 분열된 제 국가들을 얼마나 단합시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도덕성을 판단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천하위공’은 이상적 사회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국식 관점들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

를, “대도지행이면 천하위공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 가르치니 서로 화목했고, 자기 가족과 어버이만을 식구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기 아들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노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고, 장년들에게는 항상 일자리가 주어졌으며, 어린이들은 보살핌을 받았다. 병자는 치료를 받았으며, 남자에게는 각 분야의 직업이 있었고, 여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특히 힘은 각자의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적질과 혼란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굶이 바깥문을 단속하지도 않고 살았다. 이런 세상을 대동의 세상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미래 이상향으로서 ‘대동’사회를 규정한 인물은 Kang Yuwei와 Sun Yuan이다. 중국 내 연구자들은 시진핑이 ‘대동’과 ‘소강’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모우엔과 진쑹핑(우한대학교 마르크스학과)이 정리한 도식에 따르면, 중국 현대사에서 Sun Yuan이 대동을 새롭게 해석했으며, 이후 인민민주주의 혁명기에 마오쩌둥은 대동의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개혁과 개방의 시기에 덩샤오핑은 ‘소강’ 개념을 사용했으며, 이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시진핑은 ‘소강’과 ‘대동’ 사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소강’과 ‘대동’ 개념이 ‘가장 훌륭한 중국 문화전통을 창조적으로 이어받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중국 지도부의 노선과 부합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이 자국 사회발전의 방향과 세계문제 해결의 방법을 설정하는 기틀로서 ‘소강’과 ‘대동’을 사

용하였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시진핑이 제시한 ‘4개 전면(소강사회 확립, 전면적 심화개혁,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종업치당)’ 중 하나이다.

이렇듯 덩샤오핑이 제안한 ‘소강’은 현대 중국 정책에서 여전히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이 외부세계를 향한 ‘대동’ 개념이다. 시진핑은 대동 개념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세계대동과 천하일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상징한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신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 전통문화에서 대동 개념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 대동 개념은 상호의존적이며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현대 전(全)세계 국가들의 현실상황에 근거한다. 그리고 유엔정관의 기본 원칙과 그 목적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나아가 대동 개념은 협력과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대동 개념의 주창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갖는다. 먼저, 중국 대외정책의 기초를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둘째, 향후 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을 대동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첨예한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이며 건설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국제문제에 중국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개념인 ‘대동’을 국제관계에 창조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신개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동 사회’를 서구식 개념인 공산사회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현대 중국사상사에서

굉장히 의미 깊다. 중국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아카데미 소속 유재준은 중국의 사회주의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마르크스주의와 중국문화가 어울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나타났으며, 이때 ‘천하위공’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문화를 매개하는 사상이 되었다. 과거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쑨원의 ‘천하위공’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개혁과 개방의 새 시대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중앙 시진핑과 함께 이 사상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이러한 류재준의 해석은 공산주의 사상과 과거 ‘천하위공’ 사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천하위공 사상을 실행에 옮길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때 천하위공이 외적으로 확장된 것이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이고, 천하위공이 지향하는 본질 가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후난교육대학교의 평다첸은, ‘대동’ 사상은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란 고대 중국에서 회자되던 ‘세계대동(世界大同)’의 이상을 가장 고차원적으로 탐색한 결과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 전통문화가 도달했던 가장 훌륭한 사상의 정수를 반영하는 것이자 평화를 사랑했던 중국인민의 역사적 유전자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현 세계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내놓은 올바른 전략적 결정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60여 년

동안 축적된 대외정책의 경험과 교훈을 심사숙고하여 얻어낸 결론이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국식 지혜이자 중국식 계획이다. 이 계획의 방향은 운명공동체이며, 그 기반은 공동의 이익이고, 계획을 이끌어갈 추동력은 협력과 공동승리이며, 그 방법은 공동논의와 공동창조이다. 그것은 힘의 정치와 냉전논리를 던져버리고, 정글법칙과 제로섬게임으로부터 해방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좀 더 아름다운 미래를 수립하게 할 것이다."

2017년 말에 등장한, '천하위공' 사상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고대 중국의 이상적 모델이 현대 세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정치적·문화적 해석을 낳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저명한 연구자 수샤오후웨이는 '천하위공'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을 열거하였다. 먼저, 서구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 하에서 세계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세계발전관점이다. 둘째, 국제문제에 개입할 때 중국이 견지하는 원칙이다. 셋째, 세계문제를 해결할 때 중국이 취하는 문제해결방법이다. 그리고 '인류운명공동체' 개념 하에 중국이 설계한 미래세계의 계획안이다. 계속해서 수샤오후웨이는 '천하위공' 사상을 중국문명이 세계에 기여한 가치이며, '중국만이 갖고 있는 대국외교의 정신적 측면'이며,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명명했다.

국제공자학원 텐벤션 대표는 '세계정당과의 대화'에서 행한 시진핑의 연설과 관련하여 중국문명이 세계가 바람직한 미래로 가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계속해서 그는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은 동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천하대동'을 중요한 정치사상이면서 동시에 유구한 중국문명의 이상사회로 정의했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채택한 현대 정치개념들은 마르크스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사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동'은 '발전성과의 공동이용(공형발전이념 共享发展理念)' 사상과 연결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참여한 사회문제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열쇠를 제공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는 '일대일로' 건설(텐벤션에 따르면, 평화를 구축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모든 국가와 모든 인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이념적 바탕이 된다. 결국 중국의 '대동' 사상은 서구의 '정글의 법칙'에 대한 창조적 대안이며, 국제질서가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재편되고 인류문명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상해교육대학교 법학대학의 추이민은 중국 전통문화의 입장에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고찰했는데, 그의 논의는 '하나의 뿌리(일본 一本)'라는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과 '둘로 나누는(양분 兩分)' 서구식 세계관을 대비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하나의 뿌리'라는 세계관은 전체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게 해주는 반면, '둘로 나누는' 세계관은 그 안에 분열과 대립을 잉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계속해서 그는 서구문명이 걸어온 철저한 배척의 논리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서구문명이 보여준 개인의 권리,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개념을 '하나의 뿌리'라는 세계관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중국 내 연구가들은 하나같이 '천하위공' 사

상이 세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구인들은 천하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추이민의 지적은 대단히 날카롭다. 추이민에 따르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서구식 사유는 세계를 ‘나’와 ‘나 바깥’으로 구분하고 그 양자 사이의 영원한 대립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천하위공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나의 이해와 타자의 이해는 으레 일치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한 국가 내에서 ‘나’와 타자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한 국가 내에서 ‘나의 이해와 타자의 이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는 ‘나’가 속해있는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뿐이다. 사회의 결속을 위해서는 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관계의 목적은 패권을 잡는 것이다(稱霸). 외부의 적이 없으면 ‘고상한’ 개인주의는 ‘속된’ 이기주의로 쉽게 변질된다. 바로 그 시점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고 국가는 붕괴된다.

추이민은 과거 중국인들이 서구로부터 많은 것을 기꺼이 배웠다고 지적했다. 그 당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화 하는 작업은 요원한 일이었으며, 당시 중국의 보수적 ‘민족교육(國學)’은 서구 개인주의의 좋은 점은 취하고 이기주의는 억제하며 패권주의는 탈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중국의 천하대동 사상과 서구의 패권주의 사상 사이의 갈등이 현대 사상의 핵심적인 갈등양태이다.” 중국인들은 왜 서구가 자신들을 적으로 만들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중국인의 세계관과 ‘천하대동’을 이해하도록 서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서구인들이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모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는 것이다. 추이민은 서구인들이 법치주의·민주주의·자유의 이데아를 ‘천하대동’과 결합하는 바로 그때가 서구가 중국의 이상을 만날 준비가 된 때라고 말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전통적 개념들을 현대 대외정책 분야에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국 바깥에서는, 과거 대제국이었던 중국과 조공을 바치는 주변국 사이의 관계로 회귀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8년 2월 『첸민지마오』에는 중국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이 자칫 곡해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렸다.

이 사실을 쓴, 서남법정대학교 법학대학의 안윤훈은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이 점차 그 파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건설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이 사상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중국식 천하통치는 서구세계에서 점차 반향을 얻고 있다. 안윤훈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침략과 복종 위에 세워진 서구와 세계의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익명의 서구학자의 의견을 인용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관계를 중국식 방법에 의거 해결하려는 국가들이 증대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바깥에는 중국이 조공제도(朝貢制度)를 통해서 ‘천하질서(天下秩序)’를 회복하려고 하며, 과거의 조공제도를 현대세계에 발전적으로 접목시키려 한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윤훈은 인류운명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가 자유·민주·시장경제만이 평화·인권·경제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오랜 동안

선전해 왔음을 상기한다. 서구는 비서구 지역에 자신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주입했다. 그러나 중국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일반모델을 부정한다. 그리고 각국은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발전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서구와 달리 중국은 자국의 가치판단 기준과 자국의 성장모델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중국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원조를 받는 국가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인류운명공동체 사상과 ‘세계대동, 천하일가’라는 과거 중국의 이상이 모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모든 국가의 공존·공생·공동발전’의 이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골격, 다시 말해서 자주권·평등·내정불간섭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패권주의를 거부하는 등 중국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이 자신의 가치와 문명을 다른 나라에 주입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패권주의에 경도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천하질서’와 ‘조공제도’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같아지지 않으면서 조화를 추구’(화이부동 和而不同 - 『논어』 <자로> 편)하고, 상호이익과 공동이익·공동발전·번영·안보·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모든 국제프로젝트(‘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정치공동체 수립)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결코 ‘자주권 인정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안운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험난한 기나긴 투쟁을 거쳐 민족독립과

국가자주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중국은 각국의 자주권 확보 노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발전이익을 보호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자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세계질서를 확립하려는 몇몇 서구국가들의 태도와 중국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진다.”

현대 중국 정치학사전에 과거 이상적 사회모델을 뜻했던 ‘대동’과 ‘천하위공’ 개념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전통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많이 출간되고 있는 중국 측 연구자들의 저작과 해설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모델과 가치를 강요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바깥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게 자국 관점을 강요하는 서구와 자신들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사상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현대 중국정치에서 ‘천하’ 개념이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과거 조공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불안감, 과거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세계 각지에서 팽배해질 것이다. 중국은 전통문화의 긍정적 가치들(평화애호, 화이부동)을 지금에 이식한 것이 국제정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중화사상을 재현하려는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변에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상적인 정의사회 건설을 둘러싼 중국의 전통적 가치개념들이 얼마나 세계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동'의 현대적 해석은 모든 나라가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이상사회로 설정된 '대동' 사회는 '대동'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담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쉽게 뿌리를 내리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요인은 거꾸로 세계무대에 중국 사상을 보

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대동'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양상을 배제하는 것은 '대동'의 현대적 해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구사상과 중국전통을 통합한다는 역사적 경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 V. Romanov) 역사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원제 : Теория «Поднебесной» в политике Си Цзиньпина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12.2)

# 남북한 지도자의 새로운 만남

올레그 다비도프

연속된(올 4월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세 차례 만났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는 현 시점에서 양국의 당면 목적과 이해관계가 일련의 중요한 방향에서 일치했다는 사실로 정리됐다. 이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긴장 약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측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전진이며 비핵화에 대한 북미대화 재개 전망의 논의이기도 하다.

올해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평화 애호 의도’ 과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영원히 종식시킨 정치가라는 명성을 얻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바람,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언뜻 보기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는 명백하다. 양국 국경지대, 즉 육상, 해상, 영공의 ‘완충지대’ 조성 합의가 포함된 군사 분야에서의 협약 체결이 틀림없이 가장 큰 성과가 됐음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그에 따라 양측의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남북한 지역 내 10 km 지대 확대문제가 규정되어 있고, 이곳에서 포병 부대가 철수할 것이며, 부대 수준 이상의 군사 훈련이 금지될 것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의 무장 해제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며 남북 간 국경 부근에서 양측 모두의 국경 초소 및 관측 초소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지대가 남한과 북한 간 실제 해상 경계선인 북방경계선이라 불리는 서해에서도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쟁 후 UN 사령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경계선’(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멀지 않은 과거에도 양측이 서로 피를 흘리는 유혈충돌이 일어났었다.

또한 협약에서는 공동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합의가 체결됐으며, 그 업무는 현 군사정책 상황과 앞에서 언급된 협약 이행방법을 논의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방부 책임자 간에는 직접 통신선이 설치될 것이다.

정상회담 중 제시된 군사 분야에서의 상호 약속을 평가하며, 만일 그것들이 모두 유효하고 실제로 전면적으로 실현된다면, 그 결과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건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발생 위험은 본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9월 19일 양국 정상이 체결한 공동선언문에서는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지도부 차원에서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비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공고해졌다고 언급돼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따르겠다는 양측의 의도도 확인됐다.

채택된 문서에서, 그리고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이, 양측에서는 미래 협력 발전이라는 견고한 계획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철도 및 자동차 도로 건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의 특별 경제지역 조성, 개성공단 재개, 무엇보다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금강산 방문을 위한 남한 주민들의 북한 관광이다. 그러나 남한 측의 이 모든 좋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견상 현저히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조건이 제기됐다. 그것은 이를 위한 ‘적합한 조건’ 조성된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비록 공식문서에 이러한 의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남한 대표들은 무엇이 어려운 문제인가를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남북한 협력 발전에서 남한은 정해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상에서, 그리고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가해진 제재 해제가 요구된다. 다시 이러한 수단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완전한 비핵화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의 실질적인 진전이라

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즉,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한 지도부가 선언한 평화 애호 의도 및 남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전면적 협력 준비가 됐음을 확인시켜 주는 주요 시금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대한 북미 조약 이행 상황은 현재 매우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 하에 국무부가 실행했던 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있다. 최근 북미 간 제2차 정상 회담에 대한 제안과 함께 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호소는 모두가 판단하건대, 아직 워싱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려는 반발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으며, 이때 제재 취소 또는 완화는 오랫동안 잊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에서는 전적으로 9월 말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재개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남한 지도자와 핵 문제 확대를 논의했으며, 이것은 전통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북한에 의해 검토되어 오던 것이었다.

북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6월 정상 회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가장 따뜻한 표현으로 남측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음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추가 행보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 센터 가동과 북한 북서쪽의 미사일 엔진 실험 계획을 ‘영구적으로’ 중지

시키며, 또한 연변 핵 시설 (폐기) 활동을 중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실 가장 대규모 조치인 후자는 미국 측에서 그에 대응하는 보상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지막 기자 회견 중 그는 외교적으로 '북미 간 협상이 가까운 미래에 재개될 것'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주제에 대해 더 명백하게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의 체제 안전 보장과 맞바꾸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려 하고 있고,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회담 중에 북한 지도자의 개인 서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고조돼 있고, 이는 한반도에서 남한의 국제적 역할이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국내 무대에서도 대통령 자신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게끔 한다. 다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남한이 보여주는 적극성은 혹여 평양과 워싱턴이 다시금 대결 상황으로의 회귀할 개연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북미 대결은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지역 전체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군사 위기의 발발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간 완전한 대화 부재보다는 부진한 상태의 대화라도 남한의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만족했을 것이다.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방문 결과는 당연히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 상황에는 양측이 발전적으로 협력하는데 아직 심각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실제로 남북 관계의 긴장을 다소 완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애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구체성이 결여되고, 북미 상호 관계의 전망이 어두운 데에 기인한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lsy@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Нов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двух Корей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12.2)

#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총리의 집권 3기 출범

크리스티나 보다

2018년9월 20일에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현 총재인 신조 아베 총리가 승리했다. 전 자민당 간사장(2012~2014)이자 전 방위대신(2007~2008), 전 지방창생·국가전략특구 담당상(2014~2016)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총리에 맞섰으나 국회의원 405명, 지방대표당원 405명, 총 810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아베총리가 국회의원 329표와 당원 224표, 총 553표를 얻어 총재로 선출됐다. 경쟁자였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회의원 73표, 당원 181표를 합쳐 총 254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 집권 3기의 정치적 과제를 살펴보자.

## 헌법 개정

헌법개정 문제는 향후 2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단행하겠다는 의



포토: Armedia.am

지를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은 첫째, 헌법이 미군 점령기에 만들어져 ‘일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시대에 뒤쳐진 다수 조항을 새로운 국내 및 국제정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3일 평화헌법 시행 70주년 기념일에 발표한 영상메세지에서 2020년에는 개정 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 4대 항목은 첫째, 자위대 위상, 둘째, 중등교육 충실화 및 전면

무상실시, 셋째, 비상상황 대응 넷째, 참의원 선  
거구 통합 문제 해소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반대가 높은 사항은  
반전평화 조항인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  
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希  
求) 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  
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은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  
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  
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의 개정안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  
정하는 내용의 3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라도 자위대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의원의 2/3 이상이 개헌 발의에 찬성해야 하  
고 이후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  
재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 및 기타 정당  
의 표를 합치면 과반수를 상회하나 반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이 9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사회에 나타난 반전 정서는 일부 일본  
정치인의 민족주의적 야심을 억제하는 한편,  
대외정치·국방문제에서 타협을 모색케 하는 등,  
정치층의 전략적 사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  
고 있다. 따라서 현 9조를 유지하되 3항을 추가  
하자는 아베 총리의 제안은 일본 우익의 파시  
스트들의 압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제안이다.  
게다가 2012년 자민당이 발표한 개정안과도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일본의 자  
위권만 강조하고 기존의 ‘군사력 비보유,’ ‘교전

권 불인정’에 대한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국민투표 발의에 대해서는 당분  
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외정치

아베 총리는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  
인 외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산 무기  
를 구매한다 이어 MD를 포함한 새로운시스  
템의 공동 연구 추진 등 미국과의 군사·정치 협  
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7월 일본  
의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대신은 2023년까지  
54억달러에 달하는 MD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Aegis Ashore)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2018년에는 31억4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조기경보통제기 E-2D Hawkeye 9대를 구매하  
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의 미국산 무기 구매계약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관세를 적용하  
겠다는 압박에 대비해 내놓은 답이라고 한다.  
일본은 2018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를 인상한 후 발표한 제재 명단에서 예외를 인  
정받지 못했다. 미·일 양국간 이견이 남아있는  
한 향후 몇 년 안에 미·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일본은 아태지  
역에서 무역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두  
고 있다. 2018년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을 비준하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2018년 10월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베이징  
방문 및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중·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2010년 초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양국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일관계의 첫 번째 문제가 영토, 역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과의 균형 및 역제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대중국 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위협 지역에 속한 군도(난세이 제도)의 방위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국 방어책으로 해군 등 안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즉, 동남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을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정치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와의 4자 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핵실험 및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압박·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2018년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후 발표한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그것이 일본의 대북 태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북제재 역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하고, 한·미·일 3자 상호방위조약 활성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적극적인 대러 외교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4

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조건 없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라는 푸틴대통령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쌓아온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푸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일 양국은 현재까지 국경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일본은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투루프(Iturup),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섬 및 하보마이(Khabomai Rocks) 군도 등 총 4개의 섬에 대한 반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어떠한 진척도 이루지 못했다. 현재의 양국간 이견차를 생각하면 평화조약 체결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 총재로 집권 3기에 들어선 아베 총리가 주요 대외정치 문제에서 현저하게 도약할 개연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일본 자국의 정치의제와 군사력 증강 문제가 글로벌 및 지역의 도전과 대응에서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 크리스티나 보다(K. R. Voda) IMEMO 선임연구원  
· 원제 : Новый срок Синзо Абэ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Японии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9.21)

---

# 러시아-베트남 관계 발달의 현황과 도전

---

예브게니 카나예프

---

<초록> 본 논문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으로 성문화된 러시아와 베트남 관계의 현 상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특별한 러시아-베트남 사이의 협력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의 프리즘을 통해 성문화된 관계의 적법성 정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 또한 대(大)유라시아 동반자 관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와 베트남이 취하고 있는 장기 계획의 조정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와 베트남의 우선순위가 협력 위반 상태에 있고, 대(大)유라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향후 발달이 본질적인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베트남 경제 협력 상황과 전망을 평가하며 관계 위상과 결과 간 불일치를 만드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 비즈니스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에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는 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러시아-베트남 교역을 확실한 성장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과 전술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저자의 결론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 가능성과 규제에 대한 숙련되고 미묘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베트남 간 협력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스크바와 하노이가 선언적이 아닌 그 협력 자원의 처리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잠재력과 상호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며 양국을 잘못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의 관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위상을 갖는다. 2001년에는 러시아-베트남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의됐지만, 2012년에 그 위상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명칭으로 판단하면, 그러한 관계는 양국이 공통된 전략 목표를 제기하고 종합적, 즉 포괄적인 방법을 토대로 공동으로 노력하여 그 목표에 도달할 때 일련의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러시아-베트남 협력의 실상이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내용이 불분명한 표현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토대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내용을 밝히며, 다음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양측은 그러한 표현에 내재돼 있는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이끌어 낼 준비가 아직 돼 있지 못했다. 양국 체제시기에 모스크바와 하노이 관계가 고유한 소비에트 지정학 프로젝트라는 전후 맥락 속에서 발달했다면, 1990년대 양국의 대화 수준은 최소한 충족된 상태로 전개됐다. 그 시기 러시아는 이른바 ‘민주주의 열강 그룹’에 포함되고자 노력했고,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속에서 대외적 활동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스크바와 하노이의 주요 우선 순위는 이전 시기에 유지된 관계의 긍정적 관성들을 보장하는 요소들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우호 관계 원리에 대한 조약(1994년)을 체결하고 러시아-베트남 공동 선언에 서명한 후(1998년) 동반자 관계라는 규범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또한 러시아에 대한 베트남의 채무 문제를 정리했다(2000년).

비록 양국 관계의 성격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1년 3월 모스크바와 하노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그리고 여기서 양국의 협력 규모를 확대하고 그 방향을 다각화하려는 준비 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은 실제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2000년 결산에 의하면 러시아-베트남 양국의 무역액은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베트남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밀려 3억 6,220만 달러에 머물렀다. 다음 해에는 감란만(Cam Ranh)에 있는 러시아 해군기지가 폐쇄됐다.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이 마침 베트남이 APEC 의장국이던 해에 다각적 경로로 제기됐다. 얼마 후 베트남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했다. 그리고 비록 2009년 모스크바와 하노이가 55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무기 및 군사 기술 공급 조약을 체결하고, 2010년 베트남이 아세안(ASEAN) 의장국일 때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가입에 관한 협정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모스크바와 하노이 서로 간의 우선 순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둘째, 러시아-베트남 현 관계의 근간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해는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해 새로운 위상을 정의한 러시아-베트남 공동 선언에는 주로 대략적인 선언만 포함돼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 관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그 특성상 일련의 개념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양국에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 모스크바와 하노이는 포괄적인, 즉 복합적인 조정에 도달했는가? 러시아-베트남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러시아-인도의 특별 우선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또는 러시아-중국의 포괄적으로 평등하고 신뢰하는 동반자 관계와 무엇이 다른가? 2001년식 러시아-베트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2년에 작성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양국 간 일반적인 우호 관계 사이에서 원칙적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모스크바와 하노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실제 업무에서 그 내용을 담은 개념적인 구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풀어낼 수 없었다. 2016년 가을에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노골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러시아에게 베트남이 낙관주의로 흐를 수 있게 만들었다. 하노이는 닌투안(Ninh Thuan)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채무가 남아 있지 않았다(비록 베트남 지도부를 그러한 결정으로 끌고 간 아주 잘못된 사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에서 양국 관계의 성문화는 언어 표현의 그다지 설득력 있지 않은 결과를 보상이며, 모스크바와 하노이 관계의 실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도전

러시아와 베트남의 현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국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하노이의 동등한 이익 위반으로도 조성되고 있다.

아태 지역의 현 국제 정치의 특성은 대(大)유라시아 동반자 관계(또는 대(大)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은 경쟁적인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이다. 러시아가 만들어 낸 대(大)유라시아는 동반자 관계 공간과 대륙 간 공간에서의 안전 조성을 전제로 하며, 여기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과 일대일로 구상을 구성하는 실�크로드의 경제 벨트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는 베트남 지도부로 하여금 이중적 감정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 일대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중국의 투자를 받고 있는 베트남에게는 이로운 것이다. 2009년 중진국 국가의 위상을 획득한 후 베트남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액 감소와 직면했다. 불완전한 법률 제정과 예산 부족이라는 조건에서 국가 및 사기업의 동반자 관계라는 메커니즘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실현은 지연되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베트남은 6,05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 중 전력과 교통이 각각 43.8%와 22.1%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베트남은 중국을 선택의 여지 없는 파트너로 보려 하지 않았다. 베트남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차관 이자율은 결코 짝이 아니며,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중

국 기술과 설비 구입, 중국 노동력 유치가 모든 면에서 베트남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다른 자본을 찾으려는 베트남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조건이 어떤 국가의 설비, 기술, 노동력의 선별적 사용을 제기하지 않는 국제 금융 단체와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도 거절하려 하지 않는다. 비록 일본 역시 자국의 기술, 공정, 핵심적 재력의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 품질이 중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대일로에 대한 베트남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은 안전 측면이다. 하노이의 근심을 야기하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향후 변화이다. 하노이에서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설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안이 이 단체를 분열시켰다는 기억이 생생하며, 베트남이 관여되어 있는 파라셀 군도는 2002년 남중국해에서의 양측 행위 선언문에 의해 결정된 문제 조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법률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지금 하노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한 '안전 기제'라는 미래의 대륙 봉쇄 체계 조성 과 결부시킨다, 사회기반시설과 금융,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을 자국에 결부시키며, 중국은 유라시아를, 또는 최소한 그 주요 지역을 전 세계 지정학적 관심이 '매우 집중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면에서 환상을 갖기 위해 베트남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안전 체계에서 아세안은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며, 아세안에서 지위를 강화하

고 있는 베트남의 이해 관계는 지금과 같은 정도로만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맥락에서러시아는 중국의 계획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로 생각된다,

대(大)유라시아 동반자 관계와 함께 베트남은 제도적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4자 안보 동맹과 같은 다른 국제적 메가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베트남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할 수 있다. 하노이 지도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 조성과 4자 안보 동맹참가국 간 협력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인도 태평양 내러티브라는 전후 관계 속에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관심으로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APEC) 정상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생각을 표명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 2018년 1월 메티스 국무장관은 하노이 방문 중 베트남을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like-minded partner)로 규정했고, 2달 후 제 2차 인도차이나 분쟁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나타났다. 비록 현재 베트남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념화가 시작 단계일 뿐이라 하더라도, 공식적 수준에서 하노이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베트남에 있어서 남중국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인도 태평양 지역과 4자 안보 동맹에 대한 베트남 관심의 근거가 되는 반중국 동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과 4자 안보 동맹에 대한 하노이의 관심은 러시아-베트남 협력 필요성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해상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하며, 이것은 남중국해의 상황을 투사한다. 이 수역에서의 인도와 베트남 협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성화가 전 세계적 대책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중에는 남중국해에서의 새로운 러-중 기동연습에 러시아가 참여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달과 4자 안보 동맹 참가국 간 협력 활성화는 그 참여국들을 우선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 대화라는 집중된 체계에서 아세안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체계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바로 이 단체의 노력 덕분에 러시아가 유라시아 공간에서 빼앗겼던 회담이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근거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서 그러한 시나리오 오는 심한 과멸을 초래하는 형상이 된다. 베트남의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것이다.

즉, 대(大)유라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러시아-베트남 관계에서의 규합 강화 계획을 더욱더 애매하게 만들 수 있다.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중국뿐만 아니라 4자 안보 동맹 참가국들의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 발달에 대한 주안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이 향후 격화될 예측할 수 있다.

## 경제 협력의 현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 협력 규모는 크지 않다. 러시아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 무역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6억 6천만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각각 0.43%와 0.90%에 달했다. 그러한 상황의 원인을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려 보자.

첫째, 러시아는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생산-판매 부가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생산과 의류 재봉, 그리고 관광 영역으로 대표된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지역 내에 이러한 사슬을 갖추고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발달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소비에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건설된 많은 베트남 기업들과 무엇보다도 기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둘째, 반러시아 제재가 제약 요인이 된다. 신국제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금융 기구에 의존하며, 베트남은 이것이 부정적 결과를 내포하는 경우 러시아와의 협력 역제를 선택한다.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한 예는 롱푸-1(Long Phú 1) 화력발전소 건설 시 'Power Machines'사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이다. 미 재무부 특별지정국(SDN: Special Designed Nationals) 제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업은 구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거주 은행들은 계약 이행이 거부되고 베트남 은행들은 제재 중인 기업들과의 업무 경험이 없으며, 주문자인 국영 Petro Vietnam사는 계약 조항을 변

경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한 향후 경제 압력을 예측하며, 부정적인 '자연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러시아 기업은 베트남 시장에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베트남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메커니즘에 의지하여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2015년 5월 서명되어 2016년 10월 효력을 발생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베트남 간 경제 자유 구역 협약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전자 무역 플랫폼 발달, 지적 재산권 보호, 공공 조달 분야에서의 협력, 경쟁 지지와 일련의 유사한 조치를 전제로 한다. 서비스 거래와 투자 교환 자유화는 베트남과 러시아 연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나머지 국가들은 더 늦게 협력에 가담할 것이다. 2017년 결산에 의하면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베트남의 무역량이 36.6%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43억 4,000만 달러에서 59억 3,000만 달러까지) 자유 무역 지대 조성의 최초 결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교역량 증가는 무역 장벽 제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협력 저변이라는 요소로 규정된다. 교역량 증가는 매우 빠르게 그 객관적 범위에 이를 수 있다. 생활 가전 조립과 가전 제품, 섬유 제품, 신발과 같은 베트남 주요 수출품의 판매 시장은 무역협상 위원회(TNC)가 결정하며, 러시아 주요 수출품인 원료는 국제 무역업자들에 의해 장기 계약된다. 러시아도 베트남도 이러한 수출 흐름을 행정 결정에 의해 상호 시장으로 방향 전환할 수 없을 것이며, '아래에서부터의 통합'을 근간으로 한 협력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은 발달하지 못했다. 2012~2016년 주베트남 러시아 무역 대표부 M.Ju. 콜리코프 대표의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 대외무역 활동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달러통용화를 고려하면, 좋지 않은 시장 상황 또는 국가 계약 실현 결과는 러시아-베트남 간 대규모 교역 감소를 이끌어 낼 것이다.

러시아의 안정된 성장 궤도를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 부족 상태에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라는 메커니즘과 협회의 지원을 받는 독자적인 생산-판매 사슬을 조성하고 동시에 전문적 마케팅 기업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 당면 문제는 납품된 제품 서비스 센터 설립과 물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전자 상거래 플랫폼 및 메커니즘 발달, 베트남 시장에서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 브랜드 촉진 등이다. 그러나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 교류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 결론

관계 발달에서 성공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확실한 성문화이다.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경우 기본 메시지가 불확실하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현 국제 정세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이 정책의 실용적 요소를 강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은 그 성과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스

크바와 하노이가 관계 국면과 전망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들며, 양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201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관계의 현 상태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와 베트남 간에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

한 결과는 협력 자원에 상응하는 평가를 손실시키는 화려하고 과장된 미사여구에 대한 양국의 방향 설정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 지향적인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싶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lsy@hanmail.net

- 예브게니 카나예프(Е. А. Канаев) 역사학 박사(д.и.н.), 고등경제대학(НИУ ВШЭ) 교수
- 원제 : современные тенденции и вызовы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12.2)

---

#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극동 지역 주민들의 태도

---

빅토르 라린, 릴리아 라리나, 스베틀라나 토마슈크

---

본고에서는 이주자들에 대한 태평양 러시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주제로 2018년 여름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실시된 사회적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저자들은 응답자들의 답변에 의거해 해외 이주 자체와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태지역 출신 이주자들(노동자, 사업가, 학생 등)의 러시아 거주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와 아시아인의 러시아 이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들은 분석 결과를 기존의 설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동아시아 인접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에 대한 수용과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키워드 : 해외 이주, 태평양 러시아 지역, 동아시아, 민족문화 협력

## 서론

러시아인들이 아무르강 연안 지역과 연해주, 사할린을 개척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부터 이 지역의 개척 과정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토착 민족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 이뤄졌다. 이들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은 부족한 노동 자원을 보완했고, 러시아 개척민들의 농업에 아시아의 기술을 가져다줬으며,

아무르강 인근의 여러 시·군에 독특한 다양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 슬라브 및 동아시아 문화권 간 협력과 이주민들의 러시아 사회 적응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고, 이런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황화론(Yellow peril)’과 정부의 이주민 수 감소 정책, 1930년대 중후반 대다수 이주민들의 소련으로부터 추방된 사건 등이었다.

태평양 러시아 지역과 아시아 인접국가들 간

경제 관계가 회복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말 21세기 초 무렵에는 중국과 북한 노동자들, 중국 상인들, 한중일 사업가들과 학생들이 또다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의 일상적인 구성요소가 됐다.<sup>1)</sup>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수용국인 러시아에서는 이미 아시아 이주민들에 대한 고질적인 선입견과 혐오증이 되살아났으며, 이는 때때로 민족주의 성향을 띤 러시아 국민과 단체들의 공공연한 적대적 행위로 발전했다. 당시 연구 조사에 따르면,<sup>2)</sup> 적대감의 기저에는 경제·인구적 요인(중국인의 경제 및 인구 팽창)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 요인도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독자적인 문화 전통과 외부의 문화 전통 간 동질성의 정도나, 혹은 깊은 차이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브인과 아시아인들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환경, 규모, 형태 속에서 이뤄진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점차 다듬어나갔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의 여론조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들은

태평양 러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민족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달했다.<sup>3)</sup>

이 같은 경향으로 인해 경향 자체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도, 영토 면에서도 보다 더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평양 러시아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 동아시아인들 간 협력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연구가 러시아 기초과학재단의 재원을 지속됐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의 여론조사센터는 프로젝트 수행 차원에서 2018년 봄부터 여름까지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sup>4)</sup> 동 연구는 두 도시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모든 자료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총 응답자의 비율이 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프로젝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두 가지 주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첫 번째는 해외 이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의 성향 자체와, 지

- 
- 1) См.: Ларин В.Л.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змерениях (80-е годы XX – начало XXI в.). М.: «Восток-Запад», 2005. С. 271-319;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I вв. Новосибирск: Параллель, 2011. С. 346-387; Wishnick E. Migration and economic security: Chinese labour 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 *Crossing national bo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 Tsuneo Akaha and Anna Vassilieva eds. Tokyo – New York – 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5. pp. 68-92.
  - 2) Гельбрас В.Г. Россия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китайской миграции. М.: «Муравей», 2004. С. 133-139; Дятлов В.И. Совре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меньшинства: фактор стабильности или конфликта? М.: Наталис, 2000. С. 148 – 155; Ларин А.Г. Китайски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Восточная книга, 2009. С.318-340; Ларин В.Л., Ларина Л.Л.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глаз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эволюция взглядов 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11. С. 115-126; Понкратова Л.А., Забияко А.П., Кобызов Р.А. Русские и китайцы: этно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лаговещенск: Амурский гос. ун-т, 2009. С. 124-171; Alexseev M.A., Hofstetter R. Russia, China, and the Immigration Security Dilemma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006. No. 1. pp. 1-32; Moltz J.C. Regional Tensions in the Russo-Chinese Reapproachment // *Asian Survey*. 1995. Vol. 35. No. 6. June. p. 513.
  - 3) См. Ларин В.Л., Ларина Л.Л. Китай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жител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опроса 2017 г.) // *Россия и АТР*. 2018. № 2. С. 23-24.
  - 4) Опросом было охвачено по 200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гг.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и 130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методом случайной выборки с помощью анонимной анкеты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 групповой форме. Выборочная совокупность проводим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целом отражала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ов по полу и возрасту. Респондентами выступали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85 лет.



역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주민 인식의 성향 문제였다. 두 번째는 (대부분 슬라브 문화와 유럽 문명에 속하는) 수용국 주민들과 동아시아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 사이에 민족 간, 문명 간 차이 요인이 상술한 인식에 얼마나 반영되는가하는 문제였다. 본고 역시 이런 방향에서 전개된다.

## 해외 이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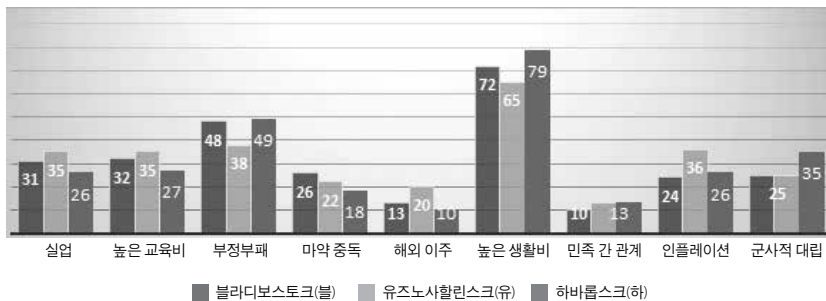
저자들은 먼저 해외 이주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의 중요한 현상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접국가 출신의 이주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태평양 러시아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 극동 지역 주민들의 비중은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49%, 51%에서 2016년 31%<sup>5)</sup>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젊은 층은 보다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학생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 인접국가로부터의 이주 문제는 고작 9위에 불과했다(2015년-2016

년 응답자 중 18%).<sup>6)</sup>

2018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민들에게 추상적 현상으로서의 해외 이주 문제는 중요도가 더욱 낮았다. ‘당신이 가장 우려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13%만이 해외 이주라고 답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이 문제에 조금 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응답자 중 20%), 두 도시에서 모두 해외 이주 문제는 설문 조사에 제시된 아홉 가지 위협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8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민족 간 관계 문제를 9위로(블라디보스토크 응답자 중 10%, 유즈노사할린스크 응답자 중 13%) 꼽았다(그림 1). 하바롭스크 주민들도 이 두 가지 문제를 8위, 9위로 꼽았으나, 그 순서는 반대였다. 이 모든 사실은 조사가 실시된 지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또한 분명한 것은 민족 간 문제의 주체가 지역 내 비슬라브 인종의 존재 자체에 대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해외이주보다 더 심각한 문

그림 1. ‘당신이 가장 우려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5) Тихоокеанская Россия в интегр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еверной Пацифики в начале XXI века: опыт и потенциал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пригранич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под ред. чл.-корр. РАН профессора ВЛ.Ларина.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2017. С. 303.

6) Larin V., Larina 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life aspirations and value orientations of the young people in North East Asia region (Pacific Russia, China, Japan) // East Asian Review. 2017. Vol. 17. p. 118.

표 1. '당신의 거주 지역에 동아시아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답변

	긍정적			부정적			무관심		
	불	하	유	불	하	유	불	하	유
임시 노동자	28	35	16	32	34	55	33	30	26
상인	25	29	18	39	38	49	30	33	30
사업가	30	42	26	35	33	42	28	25	28
관광객	64	73	55	6	11	19	23	16	18
학생	67	69	44	6	12	23	24	19	25

표 2. '극동 지역의 이주민 수 증가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주자의 출신 지역 혹은 국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불	하	유	불	하	유	불	하	유
중국	47	54	48	40	39	40	13	7	12
한국	28	24	31	56	63	57	16	13	12
북한	28	27	36	53	59	54	19	15	14
일본	24	23	28	62	64	61	14	14	13
베트남	18	22	34	65	62	53	17	17	16
중앙아시아 국가	52	54	70	35	36	23	13	11	10
카프카스 국가	54	55	68	35	35	29	11	11	10

표 3. '당신은 다음 국가 출신의 이주자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합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이주자의 출신 지역 혹은 국가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불	하	유	불	하	유	불	하	유
중국	14	17	10	75	72	82	11	11	8
한국	21	20	21	67	64	70	12	16	9
북한	17	16	10	70	70	77	13	14	13
일본	25	27	19	65	58	71	10	15	10
베트남	17	17	12	70	64	78	13	19	10
중앙아시아 국가	15	21	11	76	68	84	9	11	5
카프카스 국가	16	17	13	77	70	82	7	13	5

제는 높은 생활비 문제(블라디보스토크 응답자 중 72%, 유즈노사할린스크 65%, 하바롭스크 79%)와 부정부패(각각 48%, 38%, 49%)였다. 다음으로 22%에서 36%의 응답자들은 실업과 높은 교육비(이 문제들은 20~40세 사이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혔다), 마약 중독, 인플레이션, 군사적 대립 문제를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출신이면서 다양한 범주의 이주자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밝혀내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

비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족 간 관계 상황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응답자 중 3분의 1(각각 32%, 34%)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응답자 중 절반 이상(55%)이 동아시아 출신 임시 노동자들의 러시아 거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부터 살펴보자(표 1). 외국 상인들과 사업가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세 도시 모두 동아시아 국가에서 온 관광객과 대학생들에게는 다수가 관용적 태도를 보였으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응답자 중 약 4분의 1(23%)이 외국인 학생의 현지 거주에 반대했고, 5분의 1(19%)은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마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극동 주민들은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임시 노동자들과 상인, 사업가들이라면 우선 중국인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요 위협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실상 같은 수의 응답자들(각각 47%, 48%)은 극동 지역의 중국인 수 증가가 러시아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덜 위협적이라고 여긴다(표 2).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적어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민 중 1/4,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구 중 1/3이 외국인 혐오증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중국발 위협' 신드롬이 극동 주민들의 인식에 매우 뿌리깊이 자리잡혔다.

태평양 러시아 지역 주민 중 다수가 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응답자 중 3/4이(각각 72%, 75%),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응답자 중 82%가 중국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자들에게 대한 태도도 이에 못지않게 강경하다(표 3). 중국인들의 극동 지역 거주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1990년-2010년 사이에 있었던 중국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와 러시아 언론에서의 적극적인 반중 레토릭으로 쉽게 설명되고, 그 기저에 탄탄한 지정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반면, 일본인과 한국인, 베트남인들에 대한 배척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민족 간 관계에 있어 진심으로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인구 중 14%-16%,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구 중에는 10%에 불과하다.

이같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태평양 러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해외 이주 문제가 시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첨예한 문제들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아시아 민족들이 여러 러시아 도시에서 환영받는 이웃이 아닌 만큼, 해외 이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런 분위기는 문화적 이질성과 문명 간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그 기저에 다른 요인이 놓여 있는 것일까? 설문 조사의 두 번째 파트를 연구함으로써 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 민족문화 협력 문제

극동 주민들의 해외 이주 인식에서 민족문화 요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자료가 된 질문은 ‘당신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라는 것이었다. 응답자 중 다수(블라디보스토크 64%, 하바롭스크 71%, 사할린 73%)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응답자 중 1/4(각각 24%, 25%), 유즈노사할린스크 응답자 중 17%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들 중 단지 1/5(블라디보스토크 22%, 하바롭스크 23%, 유즈노사할린스크 16%)만이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화합하는 데 장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그림 2). 응답자 중 2/3(하바롭스크 61%, 블라디보스토크 63%, 유즈노사할린스크 66%)는 언어에 대한 무지가 당연히 장애가 된다고 본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응답자 중 1/5(22%), 하바롭스크 응답자 중 1/4 정도가 문화·문명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행동’과 ‘문화적 차이’가 장애물이라고 답했다. 이 때 응답자들에 따르면 교육 수준의 차이나 ‘개인적 선입견’은 큰 관심을 들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민족 간 관계와 타민족 문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관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결혼에 대한 질문이다. 민족·인구 구조에서 고려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해주에서도, 사할린에서도<sup>7)</sup> 국제결혼은 흔한 현상이 아니다. 최근 몇 십년 간 러시아-중국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응답자 중 절반 이

7) П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10 г.,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составляла 18,8, на Сахалине – 25 тыс. чел.

그림 2.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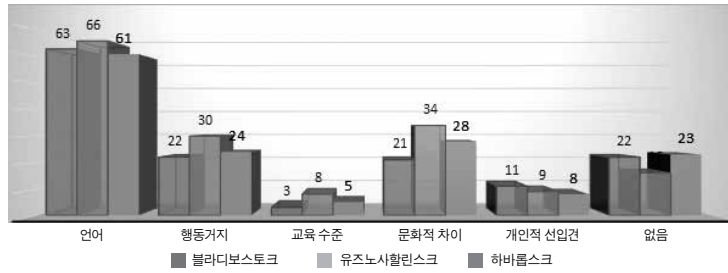


그림 3. '국제 결혼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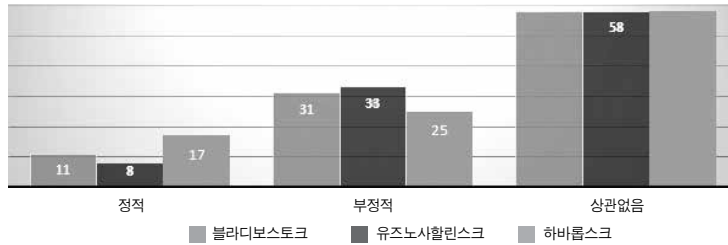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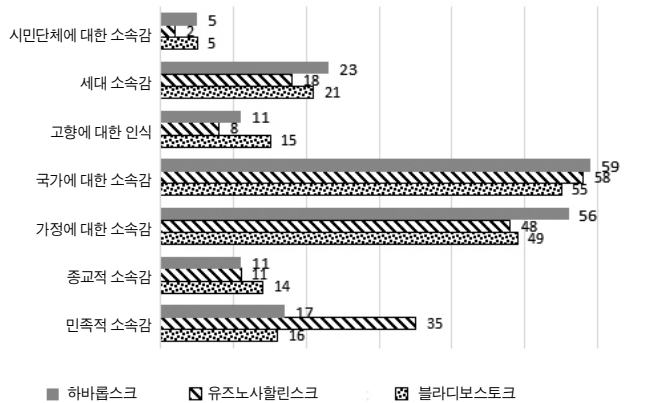


그림 4. '당신의 자아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58%)이 혼인 시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제결혼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의 비중은 하바롭스크에서 17%,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1%,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8%였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응답자 중 약 1/3(각각 32%, 33%)과 하바롭스크의 응답자 중 1/4(25%)이 국제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그림 3).

여기에서 민족 및 종교 요인은 응답자들의 자아인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국가와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다(그림 4). 응답자 중 1/4~1/5(유즈노사할린스크 18%, 블라디보스토크 21%, 하바롭스크 23%)은 세대 인식을 중요시 한다.

## 결론

이주자들이 타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하는가는 이들에 대한 수용국의 태도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태평양 러시아 지역의 두 도시,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동아시아 인접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전반적으로 협력하는데 조심스러워한다. 현재 주민들은 거주 지역에서 외국 이주자들로 인해 큰 위협을 받거나 혹은 민족 간 첨예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원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즉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이주자들의 정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전면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몇 년 간 실시된 결과와 대조해보면, ‘황화론’이라는 허깨비는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상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결국 이런 선입견들이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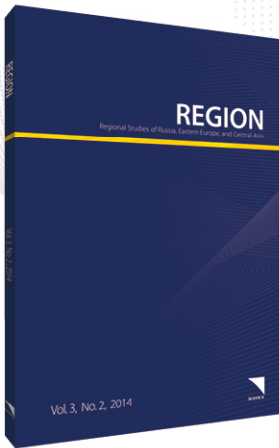
물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보다 외국인과의 협력할 준비가 더 잘 되어있다. 활발한 국제화와 글로벌한 생활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에 대한 태평양 러시아 지역 러시아 주민들의 태도는 지역 측면에서도, 혹은 여러 관점과 다양한 의견을 해독할 필요성 때문이라도 보다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빅토르 라린(V. L. La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원장
- 릴리아 라리나(L. L. Larina) 역사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여론조사센터 원장
- 스베틀라나 토마슈크(S. M. Tomashuk)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여론조사센터 선임연구원
- 원제 : Отношение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мигрантам из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출처 : ИМЕМО 발표논문, 학술지 «Россия в АТР» (2019년 게재 예정)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풀리시 리뷰



#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 2018

Vol.2 | No.4 Winter

##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